

합본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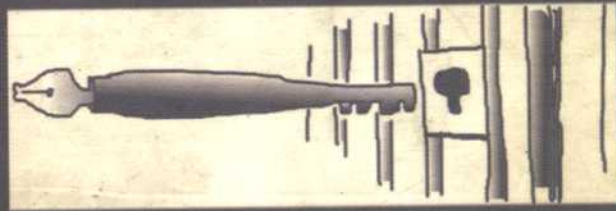
1994년 - 1999년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의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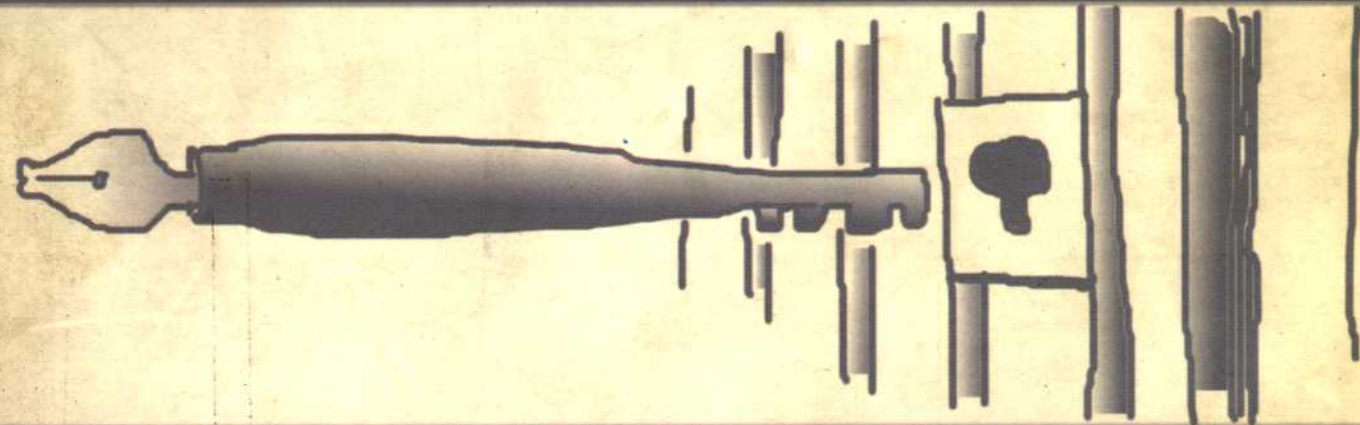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The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 (천, 나, 참) onspark E-mail: onspark@inp.or.kr
홈페이지 : <http://inp.or.kr/onspark>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주간인민권신문

이민
노동
문제
연구
집
단

합본 1호

1994-1999

북경인민출판사
북경망화위안로

항상 '경쾌한 인권'의 든든한
동지, 인권운동시강방에게.

- 전북경쾌한인권연대 드림

2000. 2. 16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합본 1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합본호를 내며

1994년 7월 1일 주간 평화와인권이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인권이 자리잡을 수 없고,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이 평화와인권연대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확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인쇄매체로 태어난 것이 평화와인권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 5개월의 세월이 흐른 지금 평화와인권은 지령 177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의 바퀴를 돌리면서 평화와인권은 이 지역의 인권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 인권 침해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평화와인권의 펜 끝이 움직였다. 5·18특별법 제정 촉구, 노동현장에서 노동탄압 고발, 교도소 내에서의 의문사 진상공개 요구,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 분쇄, 지문강제 채취 거부,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경찰청의 존안카드 공개 촉구 등의 진상은 평화와인권을 읽을 때 비로소 정확히 파악해 낼 수 있었다.

상업성이나 오락성이 전혀 없는 주간지가 독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오로지 인권만을 기사 소재로 삼는 평화와인권은 거의 휴지기 없이 지면을 발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독자들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격려 덕분이었다. 1천여명에 이르는 평화와인권의 독자들은 존엄한 존재인 모든 사람이 그 인권을 균등하게 존중받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꾸는 분들이다. 그 분들의 인권 실현에 대한 열정을 품에 안고 평화와인권이 숨쉬고 있다.

낡은 천년이 역사의 뒤안으로 묻히고, 새로운 천년이 되었지만 인권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곳곳에서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이 냉전의식 확대와 인권 유린을 획책하고 있고,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인권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개폐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인 수치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관료들, 재벌과 이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반민족적인 언론집단이 초래한 것이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민중이 떠안은 채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우리의 주권과 국토가 점탈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의식의 일깨움은 미미하기만 하다. 이러한 우리의 인권현실은 평화와인권이 달려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총 177호에 이르는 평화와인권을 한 권으로 묶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 인권 역사서가 되리라는 것, 그리고 이로써 독자들은 평화와인권을 읽는 또다른 편의를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평화와인권 합본호를 발간하게 된 동기이다. 독자들의 애독과 질책을 기다린다.

2000년 1월 3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한 권의' <평화와인권>을 내놓으면서

<평화와인권> 편집장 문만식

<평화와인권> 합본호를 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 같다. 첫째 우리는 <평화와인권>을 매개로 곳곳에 널려있고 그 뿌리가 깊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뒤쫓아오면서 동시에 인권의 관점을 확고하게 우리 내부에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자들과 지지자들이 인권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실수로 또는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짓말들과 함께 치부를 드러내는 데 힘써왔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인권이라는 무기를 무기답게 버려오지 못했다. 이 점이 지금의 <평화와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평화와인권>을 인권을 쟁취(수호만으로는 부족하다)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부 비판자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듯이 우리의 작업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제에 걸맞으면서도 시민과 민중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싸워나가도록 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하지 못해온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셋째는 <평화와인권>이 호수를 더해가면서 간혹 멀쳐내지 못했던 관성화의 경향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혁신의 계획이라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반성들은 우리가 보다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그러나 공평하게 우리가 <평화와인권> 작업을 통해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얻은 것이 있는지 얻었다면 무엇인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첫째 <평화와인권>은 매호수가 그 작업자들이 인권 및 평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직접적인 실천으로 응답한 결과 나타난 생산물이다. 이러한 작업은 몇 차례 중단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크다. 둘째 <평화와인권>은 그 작업 자체가 연대활동의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연대활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평화와인권>을 군데군데 때로는 심지어 수십호에 이르기까지 단절의 상처를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독자 대중들에게 드러내놓기까지 몇 차례 망설임이 있었다. 더구나 행간에 드러나있는 작업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들과 안목의 부족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숙함들이 그 망설임을 부끄러움과 뒤범벅이 되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따위 것'이 될지도 모를 것들을 총집합시켜 놓기로 했다. 독자들은 '한 권의' <평화와인권>을 읽을 권리가 있고 동지들은 <평화와인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로서 파란만장했던 <평화와인권>의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이전 편집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와인권> 각 호를 낼 때도 매번 그들을 생각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초대 편집자였던 유경은 선배와 노동자운동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평화와인권>에 상상력을 불어넣어준 조문익 선배께 <평화와인권> 작업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들은 기성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

라도 피상적으로밖에 다루지 않았던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와인권>의 첫 소임을 떠맡아 준 사람들이다. 또한 <평화와인권>의 시작과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정현 신부님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활동가들, 정신적이고/이거나 물질적인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더불어 인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활동에 가능한 모든 동지적 지원을 보내준 인권운동사랑방에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세계는 진보된 세상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퇴보한 세상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기가 인권과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세기의 모습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인권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되 그 투쟁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고(무엇인가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지금 투쟁을 통해 새로운 인간적인 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2000년 1월 31일

차 례

인사말	합본호를 내며	/ 3
머리글	'한 권의' <평화와인권>을 내놓으면서	/ 4 ~ 5
본문목차		/ 6 ~ 50
평화와인권		/ 51 ~ 678
부록	<평화와인권> 합본 1호 색인	/ 679 ~ 73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소개	/ 738 ~ 739

- 준비1호 (94.7.1) / 53**
- 1 면 · 전북지역 각계인사 '비상시국선언' 발표-핵문제 평화적 일괄타결, UR 국회비준 거부
 - 교황청 무기생산 비난-고용유지 명분도 비도덕
 - 조선민족박해 규탄-작가회의, 민예총
 - 2 면 · 노동계 "3자개입 금지" 독재시대 유물"-공권력 투입, 언론편파 보도
 -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박원순

- 준비2호 (94.7.8) / 55**
- 1 면 ·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국제앰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 평화신문의 냉전논리-'빛고을' 광주대교구보 논평
 - 교섭거부하고 무차별 경찰투입
 - 2 면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식출범-"민간통일운동의 구심역할 다할 것" 선포
 - 범민련 관련 3명 구속-광주전남연합 오병윤씨 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 조계사 농성장소로 첫 이용

- 준비3호 (94.7.14) / 57**
- 1 면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남북정상회담 차질없이 진행돼야
 - 여성노동자 여전히 저임금-불안정고용도 큰 문제
 - 2 면 · 93년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남한 요약

- 준비4호 (94.7.25) / 59**
- 1 면 ·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한교협인권위, 한총련 등 "사과해명" 요구
 - "편집방향 재검토 촉구"-사제단, 평화신문 발행인에게
 - AI, "조문"관련 대량구속-'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 평불협 법타스님 구속-회보내용 문제삼아
 - 2 면 ·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국제여론 환기 위한 '민중재판'추진
 - 산재보험 재정운용-"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돼야"

· 노동자, UR비준반대-여론투표 90% 한목소리

- 준비5호 (94.8.1) / 61**
- 1 면 · 철도, 지하철 보복징계, 재파업 부를수도-징계 총 3270명, 노조활동 '목조르기'
 - 세계가 손가락질한 노동정책-국제언론인연맹 정부에 항의, 가톨릭단체 인권문제 무관심
 - 전주지역 재해발생률 증가-제조업 217명
 - 2 면 ·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사회발전 세계정상회담 대비, 매달 1회포럼 개최
 -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요구-UR비준 강행철회, 케케묵은 이념시비 중단
 -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
 - 문국진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기록영화제작

- 준비6호 (94.8.29) / 62-1**
- 1 면 ·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로 몰아 9명 구속-사민청 85년 결성, 유초하 교수 등 수배
 - 전교조 관련, 8명 임용대상 제외
 - 2 면 · 미국산 자동차 강제사용 항의-전노대 "관용차 미국제 사용압력 부당"
 - 노동법 개정 연내 어려울 듯-남재희 장관 회견 "복수노조 허용 어렵다"
 - 6공 공안정국의 희생자 강기훈 석방-"결백 밝혀 터"
 - 산재환자 최저보상기준액 1일 1만7천6백9원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 준비7호 (94.9.5) / 63**
- 1 면 · 헌법재판소 긴급진단 "청문회거쳐 재판관 임명해야"-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안기부 전북지부 '사노맹' 회원구속-'주사파 조직사건'으로 조작우려
 - 2 면 · 복직판결 노동자 출근저지, 폭행-전주대성전자, 중앙노동위 명령거부
 - 사회보장 기본법안 실효성 의문-경실련, '한국사회복지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대한변협
 - 중소기업 체불임금 크게 늘어
 - 회사지정병원 '직업병'판정 의문-대우조선노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요구

- 준비8호 (94.9.12) / 64-1**
- 1 면 ·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10일,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열려
 - 2 면 · 노동문제 중재 나선 종교계-보복성 불씨 안은 철도·지하철 문제에 의견표시
 - 노총, 외국노동자 수입증지 요구-국내 유휴노동력 활용정책 촉구·합법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보다 더 나빠
 - 6 7 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양심수 646명-전북지역 강희남 목사 등 14명 구속, 민

가협 발표

준비9호 (94.9.26) / 65

- 1 면 · 한국노동시간 세계1위-생산성은 25위로 낮아, 국제경영개발연구소 분석
-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위해 14-18일 일본방문
- 2 면 ·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14일, 성폭력상담소 의료·심리치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광고시간 확대는 여성상품화 가속화시킬 것-14일 민우회 성명

준비10호 (94.10.10) / 67

- 1 면 · 노동자·여성·장애인 등 생존환경 개선필요-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더많은 사형집행 우려-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천주교인권위 '94연례모임'
- 2 면 · 한국교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계기되기를-KNCC 장애인위, 일본장애시설 등 방문
- 긴급구속영장 남발-안기부 등 강제연행 합법화 장치로 악용, 뚜렷한 혐의없이 마구남발 인권 침해 심각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
-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준비12호 (94.10.17) / 69

- 1 면 · 고문방지협약 가입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창립 1주년
- 전북 9개 시민운동단체 연합체 결성-지역현안해결 부조리 파수꾼
- 2 면 · 1교회 1장애인고용운동 전개-기독교 28개 교단 등
-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주제-전국여성대회 열려
-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침해사례 캠페인
- 10명의 목숨 앗아간 탄광사고 또 발생

준비13호 (94.10.24) / 71

- 1 면 · 긴급구속 경·검·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긴급구속 후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 전북지역 학생 국보법 4명 구속-영장제시 등 공식절차를 밟지않는 한건 올리기식의 강제연행
- 2 면 · 민교협 교수의 인권긴급토론회-'학문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같이 인정돼야'
- 국제사면위원회(AI)조사단 활동-양심수가족 인권단체 등 방문실태조사
- 노인병원 폐업 부당노동행위 판결

준비14호 (94.10.31) / 72-1

- 1 면 ·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토론회-각종 혜택에서 제외 현대판 노예로 전락

준비15호 (94.11.6) / 73

- 1 면 · 한국경찰, 미국범죄에 대해서 허위보고와 굴욕적 태도 일관-지난 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2 면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의문사는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어'
- 전북연합고문 강희남 목사 재판-10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방북이유 등을 당당하게 밝혀
- 10월 27일 전북농민대회

준비16호 (94.11.14) / 75

- 1 면 · "강기훈 초청강연회" 전주에서 열려, 전주시민회 주최 시민들 진지한 참여-'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있고 도전하고 싸우는 사람의 몫'
- 2 면 · 1면 강연회 강연요지
-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발족-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 전주교도소 재소자 지난 8일 단식풀어

준비17호 (94.11.21) / 77

- 1 면 · 강희남목사 2차공판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려-통일운동의 대의 당당하게 밝혀
- 전북지역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성폭력 예방위한 전문기관 필요
-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한교협인권위,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
- 2 면 · 전북시민운동연합 결성-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
- 【창간준비 특집대담】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산실'-전북인권선교협의회(KNCC)를 찾아

준비18호 (94.11.29) / 79

- 1 면 ·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백홍용씨 김씨 남매에게 편지
- "전북청년노동자장" 이리 송학동 성당-가족, 동료 등 150여명 참석
- 2 면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씨 1차공판 열려-공작금 받은 사실 전면 부인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개소식-성폭력 상담과 쉼터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
- 사형제도 문제점 지적-지존과, 사법정의 토론회
- 3 면 · 장기수 선생님과과의 대담
- 4 면 · 전북지역 장기수 및 양심수 현황

창간호 (94.12.10) / 85

- 1 면 · 창간사 : 영원히 지켜야 할 '인권'을 생각하며
- 2 면 · 구국전위사건 안재우씨 무기징역 선고
- 나흘간 잠 안재우고 각목으로 구타-조작간첩사건 이화춘 3차 공판
-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호남사회연구회 제3회 연합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보내야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제2호 (94.12.19)

/ 87

- 1 면 · 제46회 세계인권기념일 각 단체들 기념행사-전북지역에는 인권행사 없어 아쉬움 남겨
- 2 면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자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라도 연행은 불법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주범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결의문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재판 증인신문 연기
 -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징역 10월 선고

제3호 (94.12.26)

/ 89

- 1 면 · 강희남 목사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 재차 재판거부의사 밝혀-우리나라 법 적용, 없는자에게는 가혹 있는 자에게는 관대
 - "UR반대투쟁보고와 구속자석방 촉구대회"-대전역과 각 군에서 경찰원천봉쇄로 무산
 -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니들
- 2 면 · 국민의 알 권리,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발표-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가능성도 있어
 -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선출-사형제도위, 노동위 등 분과신설
 -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학생 4차공판-학생들 부일동 파출소 사건 무관 주장

제4호 (95.1.6)

/ 91

- 1 면 · 도내 작년 한해 시국사범 크게 늘었다-시위마다 강경대처 93년 비해 10배 이상
 - 조작간첩 이화춘 사건-안기부, 거짓진술서 작성케한 사실 드러나
 - UR반대투쟁 구속전북농민 전원 구속취소로 풀려나
 - 강희남 목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 2 면 ·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둔갑
 -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갇힌농성-폐광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 요구
 - 비전향 장기수 송환요구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요구 목요집회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 처리 "남녀 고평법" 원리 그르친다
 -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제5호 (95.1.16)

/ 93

- 1 면 · 네팔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정식발족
 - 강희남 목사 석방환영회
 -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생 5차공판-사회부조리 개선위해 노력, 최후진술
- 2 면 · 박종철 열사 8주기-고문책임자,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인권협, 고문방지협약 청원권 유보철회요구
 -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시위 덕적면 주민 사망

제6호 (95.1.23)

/ 95

- 1 면 · 부산지법, 국가보안법 위헌 제청-현행 국가보안법,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주장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제6차 공판-숙부에게서 받은 금액 공작비와 무관입증
 - 현재, "12·12" 내란, 반란 법적판단 또 회피하다
- 2 면 · 94년 산재사망자 사상최고-작년한해 2천3백18명 사망
 - 인권단체, 서강대 총학생회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 규탄시위
 - 불교 인권위 비전향 장기수 송환위한 서명시작
 - 굴업도 김계월씨 가족장
 -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 부산유괴범 살인사건 무죄입증 결정적 증거 확보
 - 여성의전화 신임회장 신혜수씨 선출

제7호 (95.1.30)

/ 97

- 1 면 ·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국제사면위,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촉구-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 요구
 - 박홍총장 사퇴촉구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을 위한 밤"
- 2 면 · 중국 교포들 인권문제 심각하다-'불법체류' 올라미로 인권유린 빈번
 - 검찰 외국인 노동자 돕기 방해-'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장 소환조사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 국회법사위
 - 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구형

제8호 (95.2.13)

/ 99

- 1 면 · 2월 8일 고문방지조약 효력 발생-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이리시민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을 위한 밤"-강희남 목사, "실천운동으로 민족의 역사 바꿔나가자"
- 2 면 · 조작간첩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천주교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 기업에게 장애인부담 감면혜택-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 장애인단체 반발
 - 정읍 태인여중교사 성폭행 사건-여성단체 조속해결촉구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7차공판-검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제9호 (95.2.20)

/ 101

- 1 면 ·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27일 서울, 북한 정신대 할머니 등 3명 참가예정
 -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광주 사회운동단체 탄압
 - 파업회사에 통보한 노조간부 구속
- 2 면 · 국가보안법, 인권실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미국무부 "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 남한편
 -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해결,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김삼석 남매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민가협 목요집회
- 범민족대회 원광대생 선고공판
- 이화춘 사건 선고공판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제10호 (95.2.27)

/ 103

- 1 면 ·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정부대표, 유엔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호
·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
· 불법이탈 외국인 연수생 검거자 포상제 백지화
- 2 면 ·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떠이기' 무산-'미국과의 외교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제10호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경찰 고문조작수사 심판

제11호 (95.3.6)

/ 105

- 1 면 ·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 세계여성회의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
- 2 면 · 사복고한 개발촉진지구 우선지정-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제출한 정부보고서-고령자,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의 고용확대
· 경찰청,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 자처하는 배신행위"
· 근로자 단결권 위협하는 직장폐쇄 위법판결

제12호 (95.3.13)

/ 107

- 1 면 · 3·8 세계여성의날 행사 및 기념식
·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 격렬 항의시위
·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발표
- 2 면 · 고 윤기남 선생 통일 민족장 집행위원장 기세문씨 구속
·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회합 알고도 1년간 방치-구국전위사건, 안재구씨 항소심 2차공판
· 박복실(요안나) 3주기 추모미사-전북지역 노동자들, 당당하게 살았던 고인의 뜻 기려
· 전북지역 산재관련 '노동자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 전북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재판증인 불출석으로 연기

제13호 (95.3.20)

/ 109

- 1 면 · 시민단체들 일제히 반대표명-군산월명공원 파괴하는 (주)대우 토취장 허가계획
·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최정환씨-16일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규탄집회
· 인권문제 이해 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
·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 비준계획 발표
- 2 면 ·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선언-"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 민가협 10차 총회-국가보안법 철폐 최대과제로
-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조짐-전남경찰청, 장례식 관려자 12명 출두 요구서
- 조각간첩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요구-천주교인권위원회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구속 비난성명

제14호 (95.3.27)

/ 111

- 1 면 · 박총장 발언, 제2 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법정진술 내용 달라 '암살지령'에 대한 진위논란
·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 2 면 ·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의 전형-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사건 항소심 공판 시작
· 군산시, (주)대우 토취장 다시 물색-시민단체들 대체토취장 제의
·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 분신 장애인 노점상 장례식, 빈민장으로

제15호 (95.4.3)

/ 113

- 1 면 ·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중인 신문에서
· 전북시민운동연합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평장"-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연구 필요
· 통일염원미사 시작돼-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 2 면 · 외국인노동자 갈 곳이 없다-외국인 노동자 인권공대위, 항의방문, 집회 등 계속
·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창립
· "월명공원 파괴는 절대로 안된다"-군산시,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체 토취장 부적격 판정
· 4·19 기폭제, 김주열 열사 추모각 초라한 준공식
· 전라북도 노동조합 연합회 제7년차 대의원대회

제16호 (95.4.10)

/ 115

- 1 면 ·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씨 석방
· 전북시민운동연합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평장"-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 2 면 · 여성장애인 공청회-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일 정신건강의 달-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 공유
· 민주세력 탄압중지, 사회단체 선거참여보장 촉구-재야단체 성명발표, 지속적인 참여 주장
· 분신철거민 박군백씨 취재기 : 영선이의 꿈을 빼앗아간 이 땅의 철거문화

제17호 (95.4.17)

/ 117

- 1 면 ·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촉구-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제안집을 통해 의사반영
·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5인미만 사업장 등 포함하면 두배는 될 것"
- 2 면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간담회-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
·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검열시작-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심의규정마련
· 군산시 미용동 토취장 전격허가-군산시민단체 강력반발
· 군산시민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 불소화를 추진하는 시민모임 출범식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호소 자살
- 정치적 탄압 중지-민정련 성명발표

제18호 (95.4.24) / 119

- 1 면 · 경찰, 해고노동자 무차별 폭행, 입원중 환자 강제연행-노동절을 맞아 전국적인 복직투쟁 저지 위해
 - 김재오씨 등 필리핀 방문
 - 유아 9백 71명 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설문보고
- 2 면 ·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9차공판-여관종업원 검찰진술서 번복
 -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해소송 선고연기
 -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0.54%-장애인에 대한 편견, 고용기피 등
 - 5월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방한-일본군 중군위안부 증언과 조사활동 위해
 - 김주열 열사 묘소참배
 - 지구의날 행사 무기한 연기

제19호 (95.5.1) / 121

- 1 면 ·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완료, 회의참석
 -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대응키로
- 2 면 ·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포럼”-지역주민 정책과정 참여해야 환경문제 해결
 - 사회대개혁 투쟁 노동자가 앞장설 것을 다짐-민주노총원년 노동절 기념 전북노동자대회
 - 전북여성후보정책토론회
 - 국보법 무죄판결자 증언-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제20호 (95.5.8) / 123

- 1 면 · 3자개입 선언으로 노동운동탄압 정면돌파-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노동탄압에 공동대처
 -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 교도소-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 2 면 · 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소 창립-새로운 상황에 맞는 연구활동의 활성화 시급
 - 광주고법 항소사건 40%, 도내에서 제기-도민 불이익과 불편감수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전화 개설
 - 전북연합 5·18 주간 행사계획
 -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축소은폐보도 규탄
 - 5·3 동의대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촉구

제21호 (95.5.15) / 125

- 1 면 · 국내인권문제관련,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등 조사활동 예정
 -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5·18 전 이장 압력

- 5·18 15주년 기념 및 기소촉구 전북도민대회-“책임자 처벌은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 2 면 · 무차별한 폭력철거, 철거민 인권은 어디에-폭력배 등이 주축인 “적준개발” 16개 철거용역
 - 북한, 8백-1천여명 수감 반국가사범 2백 40명-국제사면위원회, 북한방문에서 밝혀
 - ‘이랜드’ 그룹 노조원 해고투쟁 43일째
 - 전국연합, 집회의 자유 침해 시위통제선 철회요구

제22호 (95.5.22) / 127

- 1 면 · 정부, 국가안보위협 빌미로 강경탄압-한국통신 노동자 3명 구속, 14명 사전구속영장발부
 -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헌심판 청구-“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경상대 교수
- 2 면 ·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긴급구속
 - 철거터러 공동대책위 발족-백만인 서명운동 등 펼쳐
 - 최규하씨 면담거절-여성계 대표들, 결단촉구
 - 조각간첩 이화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 문화행사 참가교사에 서울 교육청, 경위서 요구
 - 전국연합 정책토론회-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필요

제23호 (95.5.29) / 129

- 1 면 · 경찰, 준법투쟁에 불법적인 탄압-수배자 검거위해 영장제시 무시하고 가택침입
 - 나는 노동당 입당한 적 없다-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2 면 · “50년전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유엔, 군 위안부 실태조사 보고서
 - 노동운동탄압 분쇄선전전
 - 전북여성의 전화 여성학교실-“다시 생각해보는 가족법”
 -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미군범죄 규탄 확산
 - 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최근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주한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

제24호 (95.6.5) / 131

- 1 면 ·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신공안정국 만들기-원광대학생들 ‘구국자주대오’ 사건으로 대거 연행
 - 문민정부 일상적인 도청자행-출소장기수 장롱 밑에서 도청장치 발견
- 2 면 ·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저지 위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
 -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목격자를 찾습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안정된 주거권리 보장받아야
 -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제25호 (95.6.12) / 133

- 1 면 · 정부의 한국통신 노조탄압에 종교계 등 강경대응 확산-전북지역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가져
 -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행위’-노동인권위, 김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 시작
- 2 면 · 구속된 원광대생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서울시 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증정계 방침
- 제4회 환경기행-전주 수질오염상태 심각
- 광주노동사목 김용진씨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 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 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제26호 (95.6.19) / 135

- 1 면 ·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구속자 급증-구속자 1천2백34명 중, 5월부터 41일동안 1백61명 구속
 - 경찰, 분신노동자 유골장제탈취 만행-유가족에게까지 폭력 휘둘러
 - 대통령탄핵서명 본격화-노동인권대책위, 20일부터
- 2 면 ·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기도회-"양심에 기초하지 않는 실정법은 악법"
 - 일본정부, 민간위로금으로 중군위안부 보상-여성단체, 국가차원의 사죄와 법적배상 촉구
 - 이총리 담화에 재야반박
 - 조각간첩 집건허용 촉구-천주교인권위, 법무부장관 면담
 - 박홍총장 망언 서강대 총학생회 단식농성-한국통신 가족 농성합류
 - 5·18 국민위, 종교계 최전대통령에게 증언 촉구 서한

제27호 (95.6.26) / 136-1

- 1 면 · 공소시효 넘긴 직무유기 재판, 법원에서 기각 - 박충렬씨, 이근안 등 고문경관 12명 고소사건
 -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 성남시에 철거깡패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 2 면 ·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 엠네스티, 비인도적인 대우 조사촉수
 -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각계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1천4백여명 서명

제28호 (95.7.3) / 137

- 1 면 · 대형사고 예방은 인간중심개발로 전환되어야-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보고
 - 고 박삼훈씨 장례식 열려-회사측, 장례참석 방해하기도
- 2 면 ·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인권단체 토론회, 국보법·제3자 개입금지 철폐요구
 - 문민공화국 사고일지
 - 동성애자들 권리선언-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결성

제29호 (95.7.10) / 139

- 1 면 · 최저임금은 임금억제의 보조수단-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여성·노동계 9개단체 국회에 청원
 - 7·4 공동성명발표 23주년 불교인권위 등 성명
- 2 면 · 어린이·청소년권리신장을 위한 민간보고서 완성-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촉구-일본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 넬슨 만델라 한국방문 인권단체들 성명
-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공대위 항소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제30호 (95.7.17) / 141

- 1 면 ·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노동부 경총,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강력반발
 -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국제인권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 2 면 · '아시아 시민사회 등의 연대를 위한 전북지역 토론회'-시민사회운동간의 교류 필요 인식계기
 - 정읍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재판연기
 -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전국연합" 성명서 발표
 - 방위비삭감 연대회의-사회복지예산 증액해야

제31호 (95.7.24) / 143

- 1 면 · 특별법 특별검사제로 광주학살자 처벌-전북지역 규탄집회, 전북총련 항의농성 시작
 -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산재장애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 2 면 · 48년 국보법 제정 이후, 총 2천7백여명 구속-'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열려
 -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추가연행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해야-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연에서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전북준비위원회 발족
 -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철회촉구' 제175차 수요시위

제32호 (95.7.31) / 145

- 1 면 ·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 각계운동 활발
 - 【현장스케치】 '삭발식' 끝에 터져버린 5·18 유가족의 눈물
- 2 면 · 우조교 성희롱 사건, 원심파기 판결-박용상판사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있다'
 - 8·15 특사 연기가가능성 높아져-민가협 등, 무조건적인 사면복권 수배해제 요구
 - 전북노동자들 힘모아-노동자통일대 '녹두' 발대식
 - 신귀영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 이화춘씨 석방촉구집회
 - 전북지역 3개 노동조합 장기파업 계속-한국베트로텍스 직장폐쇄

제33호 (95.8.7) / 147

- 1 면 · 장기수·양심수 석방을 위한 1995인 선언-7-13일까지 민주인사에 대한 전면적 석방 캠페인
 - 박용길 장로·은수미씨 석방촉구-엠네스티, 박장로 양심수 선정, 긴급행동 돌입
- 2 면 · 성희롱 항소심 재판 '남성위주의 판결 재확인'-여성시민단체 평석회 및 규탄집회에서
 - 장의군씨 만기출소
 - 생존권 쟁취 결의 목동 철거민들
 - 5·18 재항고 기각, 각계 항의와 성명 발표-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결성-선전 및 서명, 청원사업전개

· 교육개혁 선언정계-전교조 비난성명

제34호 (95.8.14) / 149

- 1 면 · 김선명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기득권층만 대폭혜택-초장기수 24명 등 양심수 4백 40여 명 남아
- 민가협 목요일집회 1백회-'양심수없는 날' 그리며 /95.8.14 제34호 /165
- 2 면 · 태인중교사 성폭행사건 원심파기, 유죄선고-"성폭행 피해여성들의 인권향상 계기"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10일 전주교도소에서
- 8·15 50주년 학술세미나-통일지향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육성
-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박교수 공소사실 부인

제35호 (95.8.21) / 151

- 1 면 ·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반대
- "취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경찰 취루액 가스 살포, 30여명 전신평부염 교통
- 2 면 · 5·18 특별법 제정 본격추진-부상, 사망유족 전·노씨 살인혐의 고소
- 전북지역 학생 3명 구속
- 정대협 일 수상담화비판
- 장기수 문제 해결 안돼-장기수 65명 아직도 콘크리트 감옥에
- 한일 인권세미나 개최-엠네스티 한국지부
-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촉구-민교협 성명서 발표
- 제9기 장애우 대학 개최

제36호 (95.8.28) / 153

- 1 면 · 폐쇄적인 운영 "시설과 공직자간의 이중적 부조리"-시설의 공개운영과 감시활동강화 필수적
- 대대적인 검거선동 조짐-때늦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
- 2 면 ·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북경 화이러우에서 8월 30일-9월 4일까지
-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 삼청진상규명투쟁위원회 진상규명 재차요구
- 진보언론 '말' 월권행위로 노조위원장 징계
- 기세문씨 집행유예 석방

제37호 (95.9.4) / 155

- 1 면 ·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보여
-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 2 면 ·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익산 시민결의대회
- "변형시간근로제 반대"-민주노총 성명
- 또다시 반국가단체 빌미로 우석대학생 출신 5명 구속

제38호 (95.9.18) / 157

- 1 면 · 5·18 특별법 제정요구 전국 확산-전북지역 각계각층 선언운동 전개예정
- 3자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유엔인권이사회, 정부에 개정요구
-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 2 면 · '종합병원' 장애인 경시풍조 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요구
-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운동본부, 토론회 제안
-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 구성
- 북한 수재민 돕기 캠페인-전북여성단체연합 한달간
-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검찰총장 내정자 교체요구

제39호 (95.9.25) / 159

- 1 면 ·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5·18 국민위 1백만명 서명추진
- 철거민 강제로 옷벗겨 연행-암사동 철거현장 여성주민 주장
- 3자개입금지 철폐-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 2 면 ·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농림수산부 국정감사자료에서
- 전국사제단 통일염원미사
-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
- 조작사건에 이어 프락치사건 발생-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 강력반발
- 국가보안법 부칙조항 형평성에 어긋나-이화춘씨 대법원 상고심공판 원심확정

제40호 (95.10.2) / 161

- 1 면 ·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투쟁 가속화-종교·교육·여성 등 각계 선언 시작
- 재야노동연구소에서 고성농도청기 발견돼
- 전해투, 병역특례 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
- 2 면 · 김교사 성폭행사건 항소심 승소평가 토론회-"여성계의 단합된 행동의 결과"
-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언론모니터 교육
- 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비디오 시사회

제41호 (95.10.9) / 163

- 1 면 · 전북지역 5·18 특별법 제정운동 계속 확산-도내경찰, 5·18 서명자 및 선언자 뒷조사로 물의
- 5·18 국회위중수사 촉구
- 2 면 · "여성의 평등실현전략 마련 성과"-한국 NGO 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요구
-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보상청구-'귀향모임', 1년여동안 사례수집
- 박용길 장로, 첫재판 거부
- 전남영광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제43호 (95.11.27)

/ 165

- 1 면 · “특별검사제 없는 5.18특별법은 기만”-시민사회단체들, 특별검사제 강력 촉구
· 전북지역, 특별검사제 요구 시위-전북연합,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등
- 2 면 · 정부와 민주노총 대립 격화-권영길위원장 구속, 대화상대 불인정
·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요구-유가족협의회, 5·6공 의문사 항의
· 「세계성폭력 추방기간」-전북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

제44호 (95.12.4)

/ 167

- 1 면 · 현정부는 진심으로 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고문자행·간첩조작, 노점상 살해, 통일운동탄압
- 2 면 · 비정상적 언론 집중성도되어야-군사반란자행적보도와 인권탄압행위보도 심각한 차별
· 일곱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민가협 창립 10주년 기념
· 장애인노점상 이덕인 사망사건의 경과

제45호 (95.12.11)

/ 169

- 1 면 ·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국가안보이유 장기수 보호감호처분 정당화
· 안기부, 김동식 기자회견통해 여론재판-민가협, “안기부 간첩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범민련등 양심수식방 촉구-불교인권위 성명
·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인권사회단체성명
- 2 면 · 9일, 5.18비대위 전국집회-전주·군산에서도 특별검사제 수용 요구
· 무리한 간첩조작 중단해야-간첩공대위 안기부 항의방문·박충렬씨 변호인단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 언론의 반성없이 민주개혁 없다!

제46호 (95.12.18)

/ 171

- 1 면 · 계속되는 죽음-노점상 이덕인씨 죽음이어 수배노동자 조수원씨 자살
· “민중 탄압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이덕인대책위 제안
· 노동자들, 신한국당 쇠사슬 항의투쟁-병역특례노동자 고 조수원씨 사망 항의
- 2 면 ·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법원 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판형에 제동
· 14일, 분신 경원대생 사망-대책위, 학교측의 고발·경찰 고문문제제기
· 남한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중국교포 노동자들,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대책위, 유엔인권조약 근거 제소 검토

제47호 (95.12.26)

/ 173

- 1 면 · 정부 노동운동탄압 국제적 논란-민주노총, ILO에 정부제소·OECD 노조자문위, 노동법개정 없이 OECD가입 불가능 밝혀
· 12월 현재 장기수 포함 양심수 3백 52명-11월에만 국가보안법 적용 59명, 민가협통계
·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 분지발행인 문규현신부 보안관찰법 기소-전주지검, 7일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2 면 · 5.18을 넘어 민주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법국민비대위,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판결-‘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허인희씨, 불고지되는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위반

제49호 (96.1.17)

/ 177

- 1 면 · 미결재소자 흘겁 옷으로 겨울지내-법무부, 졸속 행정이 빛은 인권침해
· 한국표준생계비, 3.2인당 189만원-민주노총 발표, 임금은 52만원정도나 모자라
- 2 면 · 최소한의 주거권확보 위한 민간공동실천지침 마련-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 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 위배-고입점수 높은 여학생이 불합격하는 것은 불평등한 정원 때문
·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분신 김시자씨 죽음-“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운동” 불붙어
· 원진레이온 실직노동자 사망-공사장서 화상 입어
· 고 장현구군 사건, 학생들 농성 계속-경원대학측에서는 천막 철거
· ‘5, 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강원도경, 남한 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4 면 · <자료>현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올바르게 하라!-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성명
· 전북지역의 양심수들을 소개합니다.

제50호 (96.1.24)

/ 181

- 1 면 · 익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의 밤” 성황-양심수식방 촉구·국가보안법 철폐투쟁결의
- 2 면 · “법률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료>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3 면 ·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전국연합·민변 성명
· “사인규명, 책임자 처벌” 이덕인 대책위, 답동성당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4 면 ·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32인 설문조사 결과발표
·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아비드 후세인 유엔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제51호 (96.2.14)

/ 185

- 1 면 · 드디어 올것이 왔는가-군산 TDI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이안구씨 처참한 죽음
- 2 면 · 계속되는 선거철 공안탄압-희망의 노래 꽃다지 대표 이은진 구속 진보정치연합 회원 무더기 구속
· 민주노총 유구영씨 간암 판정 투병중
· 택지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용인철거민 신연숙씨 사망 사건 배경

제52호 (96.2.28)

/ 187

- 1 면 ·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민주노총·민교협·전국연합·환경운동연합등 8개단체
- 2 면 ·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국제자유노련, 3월 11일 방한
- 호봉체계 성차별 문제 쟁점화-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제53호 (96.3.21) / 189

- 1 면 ·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80만명 증가
·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 전씨 세아들 즉각 처벌-유가협 등 고발장 접수
· 주거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해야-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2 면 ·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허인회씨 3차 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사노맹 관련 또 연행-김정희씨 임신3개월
· “정책의 부재, 인권의 부재”-김영삼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제55호 (96.4.24) / 191

- 1 면 · 아직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명령이 남아 있다니-관계기관 대책회의,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동절 행사 방해
· 제106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성황리에 열릴 예정-5월 1일, 12시부터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앞에서
·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도내 학생운동 조직사건!-도경, 원광대학교 정현중군 연행
- 2 면 ·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원회〉 전북지역에서도 5월 1일 1차 국민대회
· 국민참여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23일, PCS문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 3 면 ·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유가족 시신 화장고집
· 여수수산대 오염권씨 장례-현정권 타도 유서남겨
· 범민련 고애순씨 채수감 위기모면-손배소송 첫재판 5월 10일
· 장기수 2명 단식농성-광주교도소 김동기씨 등
· 단체협상 중 노동자 구속-정성철씨 등 국보법 위반
- 4 면 · 다시 돌아보기-“주둔군 범죄에 대한 미국인의 양면성”
· 조수원열사 추모사업회 30일 창립, 발기인 모집
· “장애인 고용의 실태”

제57호 (96.8.7) / 195

- 1 면 ·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2 면 · 에이피투쟁, 재판투쟁으로 연장전-첫공판에서 이재경 사무국장 폭력 등 혐의사실 부인
· 구속된 에이피노조 조직부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 기독교, UN인권소위 외국인노동자인권탄압 폭로
· 공안탄압, 이제 합법 월간지까지-전주경찰서, ‘말’지 ‘길’지 등 반품 강요
·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 노령수당지급 당면 예산쟁점으로 떠올라

제59호 (복간1호, 1996.11.15) / 197

- 1 면 · 복간사 : 다시 문제는 인권이다!
· 제1회 인권영화제 전북에서도 열려-조직위원회, 12월 1일부터 4일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16편 상영계획
- 2 면 ·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없다?-최근 공안사건, 기본권 존중조차 없어
· 심판받는 한국인권상황-제네바에서 고문방지조약 심의회 열려

제60호(복간2호, 1996.11.30) / 199

- 1 면 · 안기부법 개악저지 전북공대위 결성-공청회·시민행동의 날 행사 거행
- 2 면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개소 2주년 기념식 치뤄
· 숫자로 보는 인권실태
· 전북노동교육원 추진위원회 활동시작
· 3년동안 활동해 온 노동조합 민주노조가 세워지자 등록취소?-원광의료원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취소 파문
- 3 면 · 민주적 노동법 개정과 대학노조 탄압저지 전북도민대책위 본격활동 시작
- 4 면 ·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권리

제61호(복간3호, 1996.12.15) / 203

- 1 면 · 구태의연한 교도행정-군산교도소 ‘양심수 이동주씨 실명위기’
· 숫자로 보는 인권
- 2 면 · 전주인권영화제 암흑속에서 시작-인권신장의 계기, 젊은 층 관심많아...
· 공해식민지 탈출하자, SOFA 개정 절실-미군기지 환경조사 실시, 군산기지 하천오염 심각
- 3 면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 공청회 열려...
- 4 면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노동법 개악저지결의 높아져

제62호 (1997.1.4) / 209

- 1 면 · 국민을 짓밟은 김영삼 독재정권!-총파업투쟁 범국민싸움으로
- 2 면 · 안기부법·노동법 반대-전북지역 시민참여 불붙어
- 3 면 · 검찰파업관련 구속대상 선별작업 돌입
· 한국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4 면 · 성명서: 이른바 날치기 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신한국당과 김영삼정부에 대한 범국민적인 항쟁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제63호 (97.2.1) / 213

- 1 면 · 군산교도소 이동주씨 수술비 국비로 - 교도소 관계자 “수형자는 관비가 원칙”
· 교수들 농성돌입-악법철폐 민주적 개정 촉구
- 2 면 ·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3 면 · 날치기 주역 검찰에 고발, 유권자 75명
· 인권유린 논란 불온통신 규제 철폐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사업
- 4 면 · 핵폐기물 매립반대 결의문

제64호 (97.2.27) / 217

- 1 면 ·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2 면 · 민주노총·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폐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과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전교조
· 강희남 목사 군산교도소 수감
- 3 면 ·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 분신기도
- 4 면 · 표준 생계비 현실적 삶과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다-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

제65호 (97.3.7) / 221

- 1 면 · 이제 정보독재 시대마저 도래한다-내무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 면 · 이광철씨 무죄석방 환영대회
· 문정현 신부님께 -대구교도소에서 박영희
- 3 면 · 청소년 안전권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 발족
· 고 박복실 동지 추모미사
- 4 면 · 노동법 개정의 기본정신과 쟁점에 대한 사제단의 견해

제66호 (97.4.1) / 225

- 1 면 · 특권의 시대끝내자-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학교 첫 개설
- 2 면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정치기본권 실현의 족쇄 국가보안법 성토
· 개정 안기부법 통과 여파로 인권유린 잇달아-전주대 학생 4명 구속
- 3 면 · 정의평화정보센터INP 결성-전자주민카드시행 반대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 정의평화정보센터,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내무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 제출
· 【책소개】 법과 인권
- 4 면 · 통일맞이 겨레사랑운동
· 안기부법 재개정되어야
· 안기부 수사권 폐지운동 신문광고모금

제67호 (97.4.15) / 229

- 1 면 ·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다
- 2 면 ·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의 권리-인권학교 강연요지1
- 3 면 · 강희남목사 석방대책위 결성
· 장기수 진태운씨 운명-26년 복역 88년 출소
· 전주시민회 언론학교
- 4 면 · 미공군기지 공여토지 소유권 분쟁-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 【책소개】 인권의 역사

제68호 (97.5.1) / 233

- 1 면 ·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도내 북한동포돕기운동 활발
· "체계적인 노동자 교육, 왜 필요한가?"-전북노동교육원추진위 포럼
- 2 면 · 노동인권의 현황과 이후 과제-인권학교 강연요지2
- 3 면 ·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상 아닌 엄연한 인격주체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주요내용
- 4 면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금석이다

제69호 (97.5.17) / 237

- 1 면 · 5·18 열사정신, 돈으로 바꿀 수 없다-17주년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며
- 2 면 ·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도내 전자주민카드 반대 움직임 활발
- 3 면 · "모든 것 초월해 북한동포 돕자"-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 창립
· 여성노동자 인권확보와 평등사회 수립을 위하여-전북여노회 창립식 가져
· 97년 주요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 4 면 · [기고] 밝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71호 (99.6.18) / 241

- 1 면 · 전자주민카드, 민주주의 기본 혼든다-전자주민카드 반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 2 면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발제문
- 3 면 · 제1기 사회복지학교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 평가 및 이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
· "한총련 스스로 심판하게 하라"-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
- 4 면 · 6·10 민주정치개혁 선언-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식 전북추진위

제72호 (97.7.7) / 245

- 1 면 · 자본앞에 한없이 온순한 노동법-AP노동자 농성투쟁...복직투쟁 아홉달제
- 2 면 · 지역 사회복지, 시민관심이 관건-'정의평화정보센터 제1기 사회복지학교' 결산
· 조례제정 연대기구 만들자-주민참여, 주민권리실현을 위한 제도 필요성 절실
- 3 면 · 만도기계 노조 총파업-단협 39차례, 회사 '어렵다' 일관
· 광주학살 관련자 서훈박탈 축소기도
· F학점 여성공약-김영삼 정부 여성공약 이행 수준미달
- 4 면 · 진보죽이기 "잡아들이고 보자"-전북대에서만 대학생 20명 국가보안법 등 구속
· "인권신장이나 검찰사기냐"-검찰, 영장실질심사제 폐지추진
· 【책소개】 나, 너, 우리 [차이의 문화를 위하여]

제73호 (97.7.31) / 249

- 1 면 ·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본격화-사회단체, 주민카드반대 공대위 발족

- 복직의 확실한 전제 확보-AP노동자, 2심서 선고유예
- 2 면 · 공안탄압, 군부독재 능가-전북총련 대의원, 천막농성투쟁 돌입
- 3 면 · 권총위협에 보복구속까지-검경, 농활감시 항의하는 농민들 위협 끝 구속
· 전주교도소 장기수 단식농성
- 문민정부 4년 “농정” 심판-전농 전북도연맹 주최 전북농민대회 열려
- 4 면 · <자료>법률안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①

제74호 (97.8.8) / 253

- 1 면 · “한총련 깨기 좌시않겠다”-탈퇴거부, 공안탄압 저지 비대위 띄워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5·6공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캠페인
- 2 면 · 양심수없는 세상” 요원한가-최근 시국관련 양심수 폭증
- 3 면 · 힘차게 울리는 양심수 석방요구-5·6공 양심수 우선석방’ 서명운동 등 불붙어
· 양심수 석방 캠페인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하여①>-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민주운
동에 간첩조작
- 4 면 · <자료>법률안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②

제75호 (97.9.3) / 257

- 1 면 · 한국사람은 죽어도 좋다?-미국무부, 대인지뢰금지조약 한반도예외 추진
- 2 면 · 새로운 통일운동이 필요하다-전북지역 통일행사에 대한 간략한 평가
·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 3 면 · 양심수석방 캠페인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②>-‘6월항쟁 장기수’ 허정길-무리한 수사
와 고문이 빚어낸 인권피해자
· 【성명서】 전노씨 추석전 조기사면 제기에 대한 전북지역 사회단체 성명
- 4 면 · 미공군기지, 우리땅 거저 쓰면서 군산공항 이용료 4배 인상요구
· “가정폭력=범죄행위” 법 제정돼야-제정주간 선포 등 법제정운동 본격화

제76호 (97.9.19) / 261

- 1 면 · ‘무조건 사면론’이 나라망친다-역사의 심판이 정권욕을 넘어서야 한다
- 2 면 · “가정폭력-법으로 막아야”-방지법 제정은 여성기본권 확보 차원
· 노동·시민운동 “조례제정” 한 목소리-‘조례제정 시민연대’ 워크숍 가져
- 3 면 · “고용안정 위해 총파업 불사”-민주노총 9월말부터 비상총회 열어 총파업 결의하기로
· 양심수석방 캠페인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③>-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
- 4 면 · 마지막 냉전유물 ‘지뢰’를 걷어내자

제77호 (97.10.6) / 265

- 1 면 · 오만한 주한미군-군산 미군, 활주로 사용료 4배 인상요구
- 2 면 · 21세기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전북지역 87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식’ 따뜻한 분위기속 열려
· 동양차체, 노조결성에 ‘쇠파이프·돌 세례’로 화답 - 대우 노무관리팀 개입한 전근대적 노동탄
압

- [기고] “우리땅 사용료 요구는 적반하장”-최종수
- 3 면 · 양심수석방 캠페인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④>-학생운동탄압, 기본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아
·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진행경과
- 4 면 · 땀의 대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제78호 (97.10.30) / 269

- 1 면 · 전자주민카드를 막아내자-전북도의회 전자주민카드 '98예산책정에서 제외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앞뒤
· 전·노 사면반대 캠페인②-‘광주민중항쟁구속자회’의 전·노 사면주장을 비판한다
- 2 면 · ‘인간의 영상’을 찾아서-제2회 인권영화제 전주·군산 2개 도시에서 개최
· 서울 조기종결 이서 인천서도 인권영화제 탄압
- 3 면 · 제2회 인권영화제-전주·군산 상영일정표
- 4 면 ·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 한마당
· 두 바퀴로 여는 평화의 날-군산민항기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

제79호 (97.12.8) / 273

- 1 면 ·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국회는 악법 생산공장?
· 전·노 사면반대 캠페인③-전노사면은 민주주의를 말아먹자는 주장!
- 2 면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여성인권 사회문제화 위한 법기를 마련
- 3 면 · 인권영화제, 그 후-문규현 신부, 국보법 조사받아 관객엔 관람소감 써내라
· 양심수 석방 캠페인④-다시 양심수를 생각한다
- 4 면 · 【책소개】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 인권영화제로 뜨거웠던 겨울-전주·군산, 각계 관심속 성황리 마쳐
· 동양차체 현장, 노조탄압으로 얼룩-탄압 규탄대회 열려

제80호 (98.1.5)

/ 279

- 1 면 · 험난한 정보민주화의 길-통신연대, 전자주민카드 등 10대 사건 선정
· 전·노 사면반대 캠페인④-전·노 사면복권과 부정부패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
- 2 면 · 【신년사】 98년 호랑이의 해를 희망한 인권의 해로!
· 양심수 석방 캠페인⑤-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 3 면 ·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97.10.1 현재 총구속자 4060명
- 4 면 · 【책소개】 청소년 인권보고서
· 양심수 면회거부, 항의시위-전주교도소 인권의 사각지대
· 민주사회단체 탄압 줄이어-부민노청 이어 미래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제81호 (98.1.19)

/ 283

- 1 면 · 경제위기 속 민중삶 벼랑-IMF시대, 서민·약자들만 더욱 불리
· 정리해고 철회·재벌체제 개혁-민주노총전북본부, 정리해고 도입하면 강력 투쟁
- 2 면 · 가정폭력방지법 7월1일 시행-여성단체, 조기정착 위해 다각 노력
· “민주개혁과제, 이제는 공동대응하자”-전국적 지역연대운동조직 활동 기지개
- 3 면 · 【현장의 소리】 정리해고의 희생양, 오! 그대 여성
· 정부, 근로자파견제 2월 도입키로-중간착취 고용불안 심화 우려
- 4 면 · [인권주평] 인권선언 50주년과 우리의 현실-김승환

제82호 (98.2.3)

/ 287

- 1 면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기도회’ 등 양심수 석방운동 활발
- 2 면 · 민언협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10대 과제’
- 3 면 · 【현장의 소리】 미국방장관 코언의 ‘한국 국방비삭감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 택시노동자 권오영씨 분신 중태-‘노조탄압’ ‘야간수당체불’ 등 맞서
· 전자주민카드 백지화-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돼야
- 4 면 · [인권주평] 언론의 죄와 책임-리수현

제83호 (98.2.10)

/ 291

- 1 면 · 양심수 인권탄압 ‘공세적’-전주교도소, 인권유린 누적 심각
· “군비축소, 협력기금 증액”-전북본부 1억모금 지정기탁 ‘대복지원 전담기구’설치 제안
- 2 면 · [독자기고] OPPA, 랩 안에 담긴 사회의식-그러나 “들리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3 면 · “굴욕적 협상서명 반대”-군산미군기지시민모임, 전북공대위 구성제안 서명운동 법적 대응도 병행
· ‘세계 난민사진전’ 전주에 오다-“난민법 제정” 촉구
· 택시노동자, 어용노조 퇴진 투쟁-노조집행부 어용행각· 임금협상 결과에 분노
- 4 면 · [인권주평] “군비축소와 평화정착만이 남한과 한반도의 살길이다.”-조문익
· 남북한 정부는 하루속히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라!-대인지뢰대책회의 성명서 발표

제84호 (98.2.16)

/ 295

- 1 면 · “장기수 면회보장” 약속 받아내-전주교도소장 ‘퇴진’ 등 싸움에 밀려

- 2 면 · 양심수·장기수면회 전면보장과 최해룡 전주교도소장 퇴진 싸움일지
· 【성명서】 반개혁적 광인집단,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총파업과 집회를 철회하며
- 3 면 · 군산미군기지 위조지폐사건 파장-미군범죄추정, 한국 검·경 수사권 행사 소극적
· 여성노동자 90% “채용차별 겪어봤다”-전북여성노동자회 도내 남녀 고용실태 설문조사
- 4 면 · [인권주평] “탈시장화와 탈상품화를 위한 시민복지운동”-윤찬영

제85호 (98.2.23)

/ 299

- 1 면 · 장기구금, 고령으로 앓고 있는 초장기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원석방돼야 한다
- 2 면 · 노사정합의 파기 법안통과에 노동자 분노 - “합의안보다 다섯배 정도 후퇴”
· “미래 망치지 말라”-교육부, 대학신입생에 국가보안법 등 형사처벌 조항 열거 안내장 돌려
- 3 면 · 군산 미군기지서 또 위조지폐 발견-우리나라 형법도 ‘통화에 관한 죄’ 수사권 명시
· 일부 언론, 양심수 석방 반대발언
· 양심수에게서 온 편지 - 조덕원
- 4 면 · [인권주평]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책과제” - 김승환

제86호 (98.3.2)

/ 303

- 1 면 · 학원민주화 싸움 대학생 분신기도-총장, 원보전 학내비리폭로투쟁 ‘방화’로 호도
- 2 면 · 이적단체구성혐의부분 무죄 선고-‘혁신대오’ 이적단체구성 무죄
· 학생회장 매수사건 수사촉구-서남대 교수협, 관선이사파견 총장사퇴 요구
- 3 면 · 전북 택시노동자 ‘민택노련’ 출범-전택노련 어용성 딛고 완전월급제 확립 결의
· 군산미군기지시민모임, 경찰·검찰청장 고발키로-미군 위조지폐사건 관련
- 4 면 · [인권주평] “언론의 양심수 증오병”-리수현

제87호 (98.3.9)

/ 307

- 1 면 · 군산에 ‘살상용 대인지뢰’ 매설-최소 10년전 매설, 피해사례 확인안돼 주민들 불감상태
· 가혹행위 폭로 재소자, 전주교도소장에 행정소송-“불법 행위 은폐위해 긴급이송”
- 2 면 · “그 불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11일에 고 박복실 열사 뜻기리는 6주기 추모식
- 3 면 · <자료요약> “전북대혁신대오”사건 판결문 중 ‘이적단체구성’혐의 무죄부문
- 4 면 · [특별기고]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군산의 대인지뢰를 없애자!!-조문익

제88호 (98.3.16)

/ 311

- 1 면 · 양심수석방 ‘빛좋은 개살구’-김대중정권 인권철학, 실천의지 부재 다시 확인
· “미군은 우리땅에서 떠나라”-전주교구사제단 군산미군기지안 기습시위
- 2 면 · 도내 대량실업 전국2위 4.2%-임금체불 관련 고소고발 폭증
· <도내 인권단체 합동논평> 현정부는 즉각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라
- 3 면 ·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하라”-익산시 교육, ‘인재양성’에 빼앗긴 평등교육권
· 【소개】 인권하루소식을 아시나요?
- 4 면 · [인권주평] 신정부 100대 과제속의 사회복지-윤찬영

제89호 (98.3.23)

/ 315

- 1 면 · 도내 사립대 분규 갈수록 심화-각 대학 학생회·교수협, 비리총장 퇴진운동
· 【책소개】 보안관찰자의 꿈
- 2 면 · “지금진보적 사회운동 더 절실할 때”-사회단체들 참여 운동진로 모색 간담회
- 3 면 · 구체적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은-21세기를 여는 전북 여성정책 토론회
· “실업자도 노동자”-도내 실업자운동 태동 조직
- 4 면 · [인권주평]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을 보며-최종수

제90호 (98.3.30) / 319

- 1 면 · 실업자 운동은 일어날 것인가-정부·자치단체 사업주 편들기에 실업자운동 조직될 듯
- 2 면 · 택시노동자 생존권 투쟁가열-민주택시 “사납금제 폐지·요금인상 반대” 투쟁
· 시민단체, 선거·지방자치 참여 공개토론-“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채탕감 서명운동-가난한 10억 인구의 부채 탕감, G8정상회담에 청원서 제출
- 3 면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①>-창살 안에 삶을 묻은 사람들
- 4 면 · [특별기고] IMF시대 인권과 ‘저항의 연대’-오두희

제91호 (98.4.6) / 323

- 1 면 · “레드헌트 상영 막아라”-여당 4·3진상조사특위 전북대 당국의 문외 불허입장 밝혀
- 2 면 · 안기부 개혁 논의 활발-국회통제 강화, 수사권 폐지 등 강력촉구
· “근로자 가족 생활안정 우선배려” 판정-AP노조원, 구속기간동안 임금지불소송 승소
- 3 면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②> 감옥에서도 통일을 위해 살겠다(초장기수편)
- 4 면 · [인권주평] 대학비리 앞에 학생이 죽어가고 있다-김승환

제92호 (98.4.13) / 327

- 1 면 · 벌과금 받아내려 주민등록 말소- 금융기관의 목적 벗어난 이용 ‘기본권 침해’ 논란
- 2 면 · 익산 평준화 공청회 ‘성황’-고교생에서 초등학교까지 입시전쟁 내몰려
·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창립
- 3 면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③> 국가권력에 파괴당한 사람들(민주 통일운동 관련)
- 4 면 · [인권주평] 한총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리수현

제93호 (98.4.20) / 331

- 1 면 · 군산미군기지 투쟁 발전방향 나와-이장희 교수 군산평화학교 강의에서
- 2 면 ·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주장 철회”요구-장애인 협회, 전경련 규탄집회 가져
· “생존을 위한 싸움”-노동계 ‘고용안정’ ‘민중생존권’ 사수투쟁 벌이기로
- 3 면 · ‘불법 불심검문’ 불복중운동 확산-서울대 총학생회 경찰서장 고발, 인권단체 ‘법대로’ 거리캠페인
· <자료>제1회 평화학교-군산 “평화란 무엇인가?”
- 4 면 · [인권주평] 생산적 복지와 한풀이 복지-윤찬영

제94호 (1998.4.27) / 335

- 1 면 · 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 인권 - 전주시의회 반대로 전주치매병원 건립 물건너가

- 2 면 · “NO! MAI” 지구적 연대행동을! - 다자간 투자협정 비밀리 진행, 초민족자본에 무제한 자유 보장
· 경찰, 총기난사 물의 - 경찰, ‘경찰관집무집행법’ 무시. 권총 7발 쏘며 추격 시장통서 검거
- 3 면 · 정부, ‘위안부 일본배상’ 사실상 포기
- 3 면 · 지뢰, 군축, 그리고 평화 - 문정현
·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 최종수
- 4 면 · [인권주평] 생산성이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세상이 산다 - 조문의

제95호 (1998.5.4) / 339

- 1 면 · 본색 드러내는 김대중 정부 - 노동자·철거민 등 농성 집회장에 물대포 아니면 최루탄
- 2 면 · 정부, 실업 해결 의지 없다 - 전북 사회단체, 실업문제 토론회
- 3 면 · 법원, 가혹행위 전주교도소 손들어줘 - 교도소에 행정소송 재소자 패소 / 법원, 교도소 가혹행위엔 ‘모른체’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④> - 죄라면 일본에 다녀온 것이 죄(일본관련)
- 4 면 ·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1강좌: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세계인권선언50주년- 그 의미와 인권의 현주소

제96호 (1998.5.11) / 343

- 1 면 ·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결성돼 - 군산미군기지 반환위해 항구적 활동 벌이기로
· 임금없이 더 이상 노동력 제공할 수 없다! - 익산 만도기계 7일부터 파업 돌입
- 2 면 · 절반이상이 98년 이후 실직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실업급여 신청자 대상 설문
· 평준화 요구 봇물 - 익산 이어 군산, 교사가 앞장서
- 3 면 · “개혁방송” 최초위기 - 조선일보 반발 두려운 KBS 사내 안기부 고리도 한몫
·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⑤ - 유일한 증거 ‘피의자 신문조서’
- 4 면 ·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2강좌-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이용교)

제97호 (1998.5.18) / 347

- 1 면 · “오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규명 안된 상태 - 정부, 해결되지 전혀 안 밝혀
- 2 면 · 미군지기문제, 민족주권 자세 촉구 - 군산시민모임, 국방부에 공식요청 설명회 참가
· 도원동 주민 또 구속 - 집회 행진코스 이탈 이유
- 3 면 · ‘천리마’ 이적단체 무죄 - “국보법 무리한 적용에 제동”
· IS 17명 국보법 구속 - ‘노동자 총파업 선동’ 등 이유
· [강연요약] 제2회인권학교 제3강좌 :곽노현 -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 4 면 · [5.18기념주평] 그 누구도 5.1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문만식

제98호 (1998.5.25) / 351

- 1 면 · 고용실업대책 운동본부 출범 - 전북사회운동단체, 민중생존권 보장 등 위해 활동하기로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발족 선언문 요약
- 2 면 · 전주교도소 미전향수 접견제한 - 뚜렷한 기준없이 접견제한, 생필·의약품 차입도 제한
· 사상전향제도 철폐 주장 - 장기수 강용주씨 20일간 단식, 폭력 앞에 당당한 신념

- 도원동 폭력 축소은폐 기도 - 분노 속 단식투쟁 계속
- 3 면 ·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 -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⑥ -사상 때문에 갇힐 수 없다
- 4 면 ·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4강좌 :김승환 - 프라이버시권과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제99호 (1998.6.1) / 355

- 1 면 · 군산, 특별법 제정운동 맞올려 - <시민토론회>“미군기지 주변주민 지원운동 일환”
·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초안) -전문요약
- 2 면 · 전북 노동자 1차 총파업 단행 - 6개 사업장 4,500여명 노동자 위력 · 시민호응 확인
· 동정말고 일자리를! - 군산실업연대(준), 전북최초 실업자 조직운동
- 3 면 · “북한동포·도올 ‘시간’ 많지 않다” -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 [인권간행물] 열사회보 -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당신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다”
- 4 면 ·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5강좌 :윤찬영 -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사회복지운동

제100호 (1998.6.7) / 359

- 1 면 · 구체적인 실천안에서 터득한다 - “지령 100호를 내며” -문규현
- 2 면 · 노동자 숨통죄는 정리해고 - 군산 한화노동자 ‘생존권보장’요구하며 상경 농성
· 반민중적 IMF 구조조정 협약 수용 반대시위
- 3 면 · 위조지폐피의자 수사 미군협조 촉구 - 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 사령관에 <공개서한>건네
· 군산미공군 사령관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요약) - 군산 미공군 사령관 귀하
- 4 면 · [인권주평] 시대가 험악해도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 윤찬영
[별지] · “지령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제101호 (98.6.15) / 365

- 1 면 · IMF협약 폐기하라 - 운동본부, IMF 서울사무소 항의방문
· 공기업 매각 경제파산 초래 - 전북본부, 민영화 반대성명
- 2 면 · 안기부가 민주인사 살해은폐 주도 - 유가족, 박창수씨 등 사인 규명요구 항의방문
· 함윤경씨 불고지죄 무죄-항소심서 원심 뒤집고 승소
- 3 면 · 시내버스 CCTV로 감시 후 징계-조기출발 이유, 노조간부만 10여명 3일 정직처분
· 노점활동 합법화 요구-노점상 4천명 집회
· 어두운 면 왜 들추나-교총, 영화 「여고괴담」 반대운동
- 4 면 · [인권주평] 자치단체장 단독출마와 유권자의 선택권 - 김승환

제102호 (98.6.21) / 369

- 1 면 · 비리폭로! 교직원 해임-도교육청, 이용호씨 징계 보복성격 질어
· 이용호씨 해임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요약)
- 2 면 · 위조지폐범 “허프”를 구속하라! - 「군산미군기지 시민모임」, 기지 내 세 번째 기습시위
· 실직자·북한동포 돕기 평화행진-‘실직자 생활조례’ 제정 촉구

- 3 면 · 다시 고개드는 전자주민카드-공대위, 행정자치부에 강력 항의
· [인권영화] 다큐멘터리 “22일간의 고백”
- 4 면 · [인권주평] 국민정부여 모두를 폭넓게 끌어안아라-리수현

제103호(98.6.29) / 373

- 1 면 · 전주월드컵 서민경제 압박-유치여부, 공청회 등 시민여론 다시 들어야
· ‘대공경찰살아남기 작전’-청년단체 탄압 줄이어-관악노동청년회-안민청 이어 진보민청
- 2 면 · 갯벌 보호구역에 양식장 축조-부안군, 곰소·줄포만 등 7~8곳 특혜의혹
· 미군차에 치여 중상-신문배달 목사, 배상 오래 끌 듯
- 3 면 · 가정에서 여성·아동폭력 처벌받는다-7월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재범 판단 근거없다
- 4 면 · [인권주평] 파산한 나라, 무너지고 있는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 신축이라?-조문의

제104호 (98.7.6) / 377

- 1 면 · 준법서약은 제2의 전향제도-법무부, 양심수에 ‘전향서’ 대신 ‘서약서’ 받기로
·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2 면 · 전주, 버스CCTV로 다섯명 해고-지난 3월 ‘렌즈가렸다’ ‘수상하다’ 등 이유
· 천주교사제단, 양심수석방운동
- 3 면 ·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검찰자백이라도 임의성 없으면 증거 안돼
· ‘진보운동단체 탄압말라’-진보민청 이적규정에 사회단체 공동대응
· 감옥에서 온 편지-대전교도소에서 김성만
- 4 면 · [인권주평] 권리를 통한 권력의 분배가 가정과 사회를 인간화한다-윤찬영

제105호 (98.7.13) / 381

- 1 면 · 노조지도부가 정리해고 들먹-군산 기아특수강노조, 선거 앞두고 조합원 협박
· 【인권간행물】 양심수후원회-10년 동안 양심에 호소해 온 작은 햇불
- 2 면 · 한국 현실 가슴아프다-국제민주변호사협회, 장기수 ‘무조건 석방’ 촉구
· 역시 세계적인 ‘국가보안법’-외국단체들, “진보운동 탄압말라”
· 전주교도소 새 소장 김정제씨 부임
- 3 면 · “반민중적 구조조정 안된다”-양대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
· “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외면말라”-고용실업대책본부, 매주 금요일 거리서명
· 사회운동 정보화 눈앞-진보네트워크, 내달부터 본격 활동
- 4 면 · [인권주평] 이 지역 교육현안을 짚어본다-정인섭

제106호 (98.7.20) / 385

- 1 면 ·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전북노동자, 파업·도지사에 항의서한 전달
· “과거 권위주의 회귀 우려”-국제사회, 파업진압 관련 한국정부 비난
- 2 면 · 군산, 전국 폐기물 처리장 될 판-환경부, PCB 실험소각 채비
· 해직교사도 준법서약해야?

- 3 면 · 양심수가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전원석방촉구 집회
· 현재 “불고지죄 합헌”-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 “말만 할래도 눈물이 난다”-손병선 인터뷰
- 4 면 · [인권주평]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시장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전쟁-조문의

제107호 (98.7.27)

/ 389

- 1 면 · 정리해고 노동자 7명 구속-현자(주) 전주공장, 해고에 고소고발 남발
- 2 면 · ‘인도적 차원 석방’ 옛말-준법서약제 도입-사상전향제 강화
· 속보이는 공안정국-울산, 구청장 포함 조직사건
- 3 면 ·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① : 실직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 4 면 · [인권주평] 양심수란 무엇인가?-김승환

제108호 (98.8.3)

/ 393

- 1 면 · “지금 안 싸우면 제2, 제3의 정리해고 못 막아요”-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구속자 가족 천막 농성장
- 2 면 · 재야원로, ‘양심수 조건없이 석방’ 촉구
- 3 면 ·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② : 실직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 4 면 · [인권주평]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최원규

제109호 (98.8.10)

/ 397

- 1 면 · 양심수 가두고도 민주정권?-양심수 전원석방 위한 각종 행사 이어져
· 【인권간행물】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윤찬영/전주대학교 출판부
- 2 면 · 도원동 철거주민 연행구속 사태-전경·구청직원 합세 전원연행 후 석방, 대표는 구속
·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③ : 실직근로자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 3 면 · [강연] 국가보안법 철폐없이 ‘개혁’은 거짓말
- 4 면 · [인권주평] IMF 시대의 여성노동자-박정희

제110호 (98.8.17)

/ 401

- 1 면 · 뒤로가는 인권정책-8·15특사,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 8.15 특사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시각
- 2 면 · “울산 현자, 용역강패 모집”-용역업체 면접까지 받은 두명으로부터 제보
· 구속사태 책임 발뺌-각계 대표, 전주공장 면담
- 3 면 · 사고지역 따로없다-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서둘러야
· “미군철수·국보법폐지”-전가대협, 미군기지 앞 집회
· [자료] 대인지뢰 유실사고에 대한 성명
- 4 면 · [인권주평] 노동자가 주장하는 경제정의-염경석

제111호 (98.8.24)

/ 405

- 1 면 ·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태령, 이윤은 넘치고 노조원은 자르고
· 국가보안법 7조를 아십니까-인권운동사랑방, 국보법 폐지 위해 사례수집
- 2 면 · 상록수 가르친 교사 파면-서울 영신여시고, 전교조 교사 탄압
· 강희남 목사 다시 구속-8·15 통일대축전 행사직후
·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 ‘인권운동 젊은연대’ 창립
- 3 면 ·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쓰는 이유-강용주
- 4 면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배경내

제112호 (98.8.31)

/ 409

- 1 면 · 문규현 신부 구속-무리한 국보법 적용 공안기류 조성
· 국보법 적용, 공안당국 입맛대로
- 2 면 · 해고통보 줄짓는다-도내 노동자 정리해고 맞선 파업 잇달아
· 현자, 여성조합원부터 정리해고 도마에
- 3 면 · 조합간부 닦치는대로 연행-만도기계 위원장 등 6명 연행 구속
· 구속 노동자 김영삼 때보다 많다
- 4 면 · [인권주평] 경제위기와 시민운동-최원규

제113호 (98.9.7)

/ 413

- 1 면 · 만도사태, 노동자 분노폭발-정부, 대규모 경찰·중장비 동원해 폭력진압
- 2 면 · 인권유린 관련자 처벌해야-문규현 신부, 무죄석방운동 확산
· 강희남 목사 석방 촉구
- 3 면 · 군산, 한국인 여성 피살-미군 용의자 수사 제대로 못해
· 경찰, 신체의 자유 억압-영장기각률 크게 증가
· 평준화 즉각실시 여론 비등-도교육청, “연내결정” 되풀이
· 일본도 노동법 개악
- 4 면 · [특별기고] 문규현 신부는 무죄다-김승환

제114호 (98.9.14)

/ 417

- 1 면 · 미군이 쓴 유탄 민가에-미군부대 인근마을들 사정거리 안 위치
· “문신부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서학동성당 매주 5명 시국기도회
- 2 면 · “실업노동자 인권 보장하라”-고용실업대책 전북본부, 최초 실업노동자 거리행진
· 20% 빈국 국민 소비율 겨우 전체의 1.3%-UNDP 보고서, 세계빈부격차 심화
- 3 면 · 앰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변화 안해”-싸네 총장 ‘국보법 개정’, ‘준법서약제 폐지’등 촉구
· ‘영남위’ 15명 전원 기소-대책위, “짜맞추기식 공안조작”
· 군산시민연대 출범-민주노총 시협·전교조 등 참여
· 한국정부에 대한 AI 주요 권고사항
- 4 면 · 서울국제민중회의 선언문-‘신자유주의 맞선 세계 민중연대’ 결의
· 위협받는 노동자 ‘안전권’-안전관리자 계약직화 추세

제115호 (98.9.21)

/ 421

- 1 면 · 경찰, 평화행진조차 막아-문신부 석방촉구 촛불행진 원천봉쇄
· '국민의 정부 6개월' 양심수 대량 양산-민가협 보고서, 보안법위반 계속 증가
- 2 면 · 인권법 · 국가인권기구 밀실추진 문제있다
· '실업자 생활지원조례안' 도의회 청원
- 3 면 · 열사 명예회복 · 의문사 진상규명 시급-열사 범추위, 특별법 청원 등 움직임 활발
· '새만금 백지화 음모세력 주장' 발언 책임져야-전주시민회, 유지사 '망언' 규탄
- 4 면 · [인권주평] 언제까지 공권력은 자본의 사병역할을 할 것인가?-염경석

제116호 (98.9.29)

/ 425

- 1 면 · 국가인권위 권한 유명 무실-법무부안, 독립성 · 실효성 거의 없어
· 정부가 실직자 도와야-전북 고용실업본부, 전국최초 실업자 생활지원조례 청원
- 2 면 · 새만금호 정화해도 소용없다-감사원, "제2의 시화호 전략 우려"
- 3 면 · 전북경찰, 사제복 입은 신부 집단폭행-경찰 책임자, '정치집회니까 불법' 망언
· 미군범죄 해결된 것 하나없어 시민들 분노-군산시민모임, 미8공군부대장 퇴진 요구
- 4 면 ·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상 단속-무대책 단속 항의 노점상 분신 증태
· 전자주민카드 왜 미련 못버리나-전북공대위, "완전 폐지" 주장
· 벼랑끝 선 은행노동자들-파업 앞두고 '반국가사범'으로 찍혀
·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정당화 도구"-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투쟁

제117호 (98.10.12)

/ 429

- 1 면 ·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해야-전북토론회, "법무부 지나친 개입이 문제"
· "강희남 목사를 석방하라"-탄원서와 기도회 등 잇달아
- 2 면 · 미군 유탄폭음 임신부 조산-박순녀씨 피살사건도 해결 힘들 듯
· 불심검문 피해 국가배상청구-대학생 5명, 각 5백만원씩 청구
- 3 면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전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전자우편'건 호지부지 잊혀질 듯
- 4 면 · [특별기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자리 매김-김승환

제118호 (98.10.19)

/ 433

- 1 면 · "국민정부에 통한의 슬픔"-문규현 신부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 다시 재판정 선 통일운동가-강희남 목사도 첫 재판
- 2 면 · 농성투쟁 중 '우발사고'-군산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20명 무더기 기소
· 몸싸움 채고조합원 부상-군산대, 복직투쟁 중
· 정리해고 비관자살-뇌성마비 동생도 살해
- 3 면 · 결국 치매병원 시직영 방침철회-전주시, 치매병원 민간위탁 결정- '공익성'실종 우려
· 더 무서운 '합법'-도청같은 감청 부쩍 늘어
- 4 면 · [인권주평] 밥줄 끊고, 감옥에 보내는 세상-문정현

제119호 (98.10.26)

/ 437

- 1 면 · 집요한 시민행동의 성과-위조지폐범 허프에 1심에서 5년형 선고
· 문규현신부 · 강희남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 2 면 · 시민의식 개선 주력할 듯-새만금간척 반대, 전북시민 대책회의 결성
· 자주대오 사건 3명 2-3년 구형
- 3면, 4면 · (요약) "양심과 인격 가두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문규현 신부 제 1차 공판 모두진술 내용

제120호 (1998.11.2)

/ 441

- 1 면 ·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익산 만도기계 구속노동자 첫 공판
· "영장실질심사 받을 권리 고지 안해 석방"
- 2 면 · 누구나 마음놓고 걸을 권리-시민 보행권, 기본적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 3 면 · <요약>익산 만도기계 최후진술 요지-"가족 생계 위한 최후수단이였다"
- 4 면 · [인권주평]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돌보는 여론을 형성하자-김금옥

제121호 (98.11.10)

/ 445

- 1 면 · "민중연대 새 희망을!"-'98민중대회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
· 현대자동차 3차공판-회사측 증인들, 증언 번복
· 만도기계 보석으로 석방
- 2 면 · "인혁당, 유신정권이 조작"-진상규명 · 명예회복 위해 대책위 발족
· 전북대 혁신대오 이적단체 무죄확인
· 통신비밀보호법 보완해야
- 3 면 · 오사카 노동자들 금요집회 참석-"미군부대, 양국 민중에 불행의 근원"
- 4 면 · 민간단체, 독자적 인권위원회법안 공개-인권위 독립기관으로, 권한 대폭 늘려
· 전자주민카드 입법추진-행자부, 이번 국회에서 입법추진

제 122호 (98.11.17)

/ 449

- 1 면 · 부당하고 맞선 힘겨운 싸움-기아특수강 해고자들 50일 넘게 농성투쟁
- 2 면 · [자료] 보석허가청구서-"문규현신부 잠입탈출죄 적용은 억지"
- 3 면 · 만도기계 노조파괴 나서-노조간부 구속 이어 징계위 회부
· 익산 만도기계 실형 선고
· 김삼석씨 연행조사
- 4 면 · [인권주평]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문정현

제123호 (98.11.24)

/ 453

- 1 면 · 택시파업에 사장단 백기-전주 7개 회사, 수입금 전액관리제 수용
· [인권간행물] 불법도청 '합법'감청-'영남위원회'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
- 2 면 · '시와 노래의 밤' 열 돌 맞아-민가협, 양심수 고난 · 희망과 한길 걸어
· 언론주인은 나-전주시민회, 5회 언론학교
· 인권대회 열려
- 3 면 · 실직자 지원 조례(안) '찬밥'-재정부담이유 도의회에서 미료(未了)처리

- 한미행정협정, 한국민 권리 짓밟아
- 중고생 인권선언 제정-차별거부·결사의 자유 등 천명

4 면 · 제3회 인권영화제 전주 주요 상영작 소개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124호 (98.12.1) / 457

- 1 면 · 국보법, 50년이면 충분하다-‘국가보안법’ 제정 50년 폐지운동 50년
· 인권선언50돌 행사 다채
- 2 면 · 명동성당, 농성단 강제철거-‘민주화성지’ 명성 먹칠
· 울산동구청장 보석촉구-정리해고 반대 공약한 구청장, ‘동창회’ 사건 구속
- 3 면 ·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 선포-여성단체연합
· “새만금, 환경재앙 짜초”
- 4 면 · [인권주평]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김승환

제125호 (98.12.8) / 461

- 1 면 · 자살발표 곳곳 의문투성이-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의혹 수두룩
- 2 면 · “레드헌트 상영 그 뜻대로”-군산, 지난해 이어 11일부터 사흘간 인권영화제
- 3 면 · “긴급감청제도 폐지해야”-민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서 국회·각 당 제출
·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운동체 결성-‘사회진보연대’창립총회 마쳐
- 4 면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해야”-국제엠네스티 김대통령에 공개서한 보내
· 국가보안법 철폐 달갈시위
· 신정연휴 축소 중단하라
· “양심에 따랐을 뿐”-전북 출신 조각간첩피해 양심수 이화춘씨 준법서약 거부하며 대전교도소 4년째 수감중

제126호 (98.12.15) / 465

- 1 면 · 생존권 담보한 인권유린-동암복지관, 구타·성폭행 등 다반사
· 인권선언50돌 기념식 가져
- 2 면 · 경찰이 피의자 가혹수사 의혹-‘조직폭력배’진술 받으려 구타등 가혹행위 의혹
· IMF이후 환경정책 퇴보-환경련, ‘전북 환경7대뉴스’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1위
- 3 면 · 기아특수강 구속자 첫 재판-‘감금’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 “독점자본 강화하는 구조조정 반대”
· 사제단, 양심수 집단면회
- 4면-8면 · <평화와인권> 창간4주년 기념 좌담/김대중정권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지역 인 권운동단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제127호 (98.12.22) / 473

- 1 면 · 사찰자료 정보공개 청구-7개 사회단체 전북경찰청장 앞으로
· 감옥 인권실태 공개
· <광고>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금요집회1년-50회
- 2 면 · 동암, 조사특위 뜨자 시설폐지 신고-전주시의회,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조사특위 구성

- 노조설립 불구 사측 ‘버티기’ 일관-대우상용차사무연구노조, 사측 노조와해 공작 직면해 총력 투쟁

3면-4면 · <평화와인권>이 뽑은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제128호 (98.12.29) / 477

- 1 면 · 동암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동암법인 전반 조사”-사법조치 촉구 활동도
· “약속지킬 의지있나”-민주노총 전북, 국민회의 농성
- 2 면 · 전체세대 69% “관리비널 돈 없다”-군산 모 영구임대아파트를 통해 본 빈곤문제
· “공습 미국지지 경솔”
· 동암재활원 사태 일지
- 3 면 · <자료요약> 한국 감옥의 현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사 각지대”
- 4 면 · [특별기고] 동암재활원 사태를 보면서-윤찬영

제129호 (99.1.5) / 483

- 1 면 · 새해 학생운동 ‘대탄압’ 예고-고대 총학생회장 등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 ‘영남위’검찰구형 “분노”
· 광고-<인권하루소식>독자가 뽑은 '98 10대 뉴스 인권뉴스
- 2 면 · [신년기고] 스스로가 희망이 되면 무엇이 두려울까?-조문익
· [자료] 성명서-정부는 안기부를 통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제130호 (99.1.12) / 485

- 1 면 · 노동감시 새기술 도입 말뚝-현대자동차전주공장, RF 카드 일방적 지급 채비
· “새해에도 열심히 투쟁해야죠!”-기아특수강 천막농성 100일
- 2 면 · [공판안내] 군산기아특수강 구속노동자 제2차 공판(구형)
· 【자료소개】 98국정감사 자료집-새정부 감사자료 한눈에
- 3 면 · <자료>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이적단체 구성 무죄 : 규약 문건없고 대부분 신빙성 없는 증거들
- 4 면 · [인권주평] 인권수준-국민수준-김의수

제131호 (99.1.19) / 489

- 1 면 · 새만금 “최대 갯벌 파괴”-한·일 습지보전단체 ‘새만금선언’ 채택
·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미궁-‘자살’ 끈 교도소가 불태워
- 2 면 · 불법사찰도 비공개 자료?-사회단체들,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준비
· 검찰증거 그대로 인정. 시민단체, “사법부 폭거”-영남위사건 1심 중형선고
· “정리해고 억울...수용못해” 최후진술-기아특수강 구속노동자 공판, 검사 징역3년 구형
- 3 면 · 노동감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작업장 사생활 포기 말아야”
· <동암 공대위 기자회견>-“인권유린 사실확인”
- 4 면 ·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에 부쳐

제132호 (99.1.26)

/ 493

- 1 면 · 현대차 전주 RF 카드 도입-노사 서면합의-공대위 “노조집행부 불신임”
· <새만금> 중단 촉구-사회단체, 매주 반대 캠페인
- 2 면 · 불법사찰 비공개 위헌· 위법-사회단체들, 행정소송· 행정심판 26-27일 청구
· [광고] 도내 민간차원 실업자 지원활동
- 3 면 · 이주의 인권뉴스
- 4 면 · [인권주평] 98년 인권침해자-고홍석

제133호 (99.2.2)

/ 497

- 1 면 · 손성모씨등 사면·안철·등-3.1석방 대상 ‘비전향’ 정부주장 사실과 달라
· “교도소 답변 못민는다”-평화와인권, 은폐의혹 다시 제기
· 기아특수강 석방-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 2 면 · 결정안 즉각 수용 촉구-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항의 성명
·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국제규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3 면 · 잘못된 진단, 빛나간 처방-민주노총 전북본부 청문회 규탄
· “노동감시 반대!”-정보통신연대 INP 캠페인 돌입
· “에바다 재단 약속지켜라”-공대위 등 100여명 건기대회
- 4 면 · [인권주평] ‘정상’과 ‘장애’ ‘자선가’와 ‘수혜자’, 그 사회적 이분법을 넘어-이재천

제134호 (99.2.9)

/ 501

- 1 면 · 채소자 우편물 ‘꿀꺽’-군산교도소, ‘인권지침’ 담긴 책자 출소날 내놔
· 손성모씨 석방 난망-국민회의 “29년 이상 17명” 사회단체들, 석방촉구 기자회견
- 2 면 · 적자타령에 국민건강권 침해-전북대병원 통해 본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 【인권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폐념
- 3 면 · 공공근로 임금 또 깎다니-전북지역 노동단체 성명서 내
· 새만금 조사단 구성하라-전북공대위, <조사단 구성위원회>제안
· 동암공대위 감사원 진정
- 4 면 · 특별검사제만이 해결책-법무부장관· 검찰수뇌부 퇴진 :법조비리 처리에 항의 붓물
· 동암비리 진정-진정서

제135호 (99.2.23)

/ 505

- 1 면 · 조건없는 석방 불과 19명-준법서약 걸려 손성모· 신광수씨 빠져
- 2 면 · 삭감이 아닌 확대를!-공공근로 임금, 도지사 항의 방문
· [자료:척사학위논문] 지방정부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새만금 프로젝트 사례를
· 중심으로-조상진
- 3 면 · 6.25때부터 이어진 관행 여전-시특위 사회복지시설 조사활동 중간 보고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중간조사결과①
- 4 면 · [인권주평] 노숙자, 그는 우리의 부모, 형제입니다-이희운

제136호 (1999.3.2)

/ 509

- 1 면 · 미군범죄 석연찮은 무죄판결-사법부, 화폐위조 인정 불구 항소심서
- 2 면 · 경찰, 시위노동자 짓밟아-군산노동사무소 항의집회 도중
· 구속 양심수 치료 호소-영남위 이른미씨 교도소에서 고통
- 3 면 · 수용자 대부분 환자-요양· 치료 방치-시특위 ‘사회복지시설’조사활동 중간보고② ;노인복지시
· 설편
- 4 면 · [인권주평] 미래의 생존권이 흔들린다 :국민연금 파동에 부쳐-윤찬영

제137호 (99.3.9)

/ 513

- 1 면 · 재야인사들 여권 안내취-법적 흠 없어도 ‘경력’ ‘조사중’ 이유
- 2 면 · ‘직원선동, 불미’ ...악선전에 신상정보까지 빼내 감시
- 3 면 · “시설 나가면 부랑인”-전주시의회 특위 ‘사회복지수용시설’조사 중간보고③ : 아동복지시설편
· “안싸우면 희망없다”-도내 건설노동자 들고 일어나
- 4 면 · [인권주평] 장기수 석방-그 역사적 의미-김의수

제138호 (99.3.16)

/ 517

- 1 면 · 참을수 없는 노동탄압-노동사무소· 기아특수강 유착 ‘문서위조’ 의혹
· 알맹이 놓친 ‘인권보장위’-실효 있을까 의문
- 2 면 · 개선책 논의-“비판은 부족”-전주시특위 활동 결산 공청회
· 【새책소개】 '98고용실업 정책자료집
· 천주교사제단 미군지기 안 시위
- 3 면 · “민간공동조사단 왜 안하나”-새만금 공대위, 공조단 구성 촉구 시민대행진 열어
· 철새조망대에 위락시설?-군산시민, 금강호 위락시설 반대
· [광고] “이제는 고운 옷 입고...”-고 박복실 열사 7주기 추모식
- 4 면 · [인권주평] 보육원의 청소년들-이재천

제139호 (98.3.23)

/ 521

- 1 면 · 경찰, 피의자 인권 무시경-군산경찰서, 대기실 없이 유치장 구금
· 교도소 의문사 조사단 구성
· 인권간행물-인권교육의 길잡이
- 2 면 · 군산노동자 투쟁 경과
- 3 면 · 군산노동부· 경찰, ‘노동자탄압’ 공조-항의민원 노동자 모두 연행 ...1명 구속, 3명 입건
· 실업자도 멍치자-첫 실업자 학교 큰 호응 ...나도 실업자
- 4 면 · [특별기고] 조성만열사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며-고홍석

제140호 (99.3.30)

/ 525

- 1 면 · 노동부 ‘공정성’ 잃었다-‘단협체결했다’ ...문서위조 쟁점 왜곡
- 2 면 ·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고삐-군산 문제 물려 열기 고조
· 전주교도소 조사단 방문 거절-천주교사제단· 평화와인권 등 항의서한 전달

- 3 면 · 사회복지 수용시설 '빙벽' 깨기 첫걸음-동암 공대위, '수용인 복지와 인권' 토론회
· 여성의 쉼터 개소
- 4 면 · [인권주평] 후진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이희운
- 5면-6면 · [특별기고] 인권유린 장본인이 인권유린을 감시한다?-홍근수

제141호 (99.4.6) / 531

- 1 면 · 인권운동가들 단식농성 돌입-인권법안 반대 의사 분명히...30여명 7~13일
- 2 면 · <기획> "군산은 지금 투쟁중"-군산대 노동조합 편
- 3 면 · 미군기지 마을 주민 소음피해조사-군산시, 녹색연합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조사나서
· 의문사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사발
· 새천년 여성의 '자리'는...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1기 성평등 교육 여성아카데미
- 4 면 · [인권주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하여-김의수

제142호(99.4.13) / 535

- 1 면 · '인권보장위' 비웃는 경찰폭력-전북경찰 각종비리연루 · 폭력남발
· 경찰관련 사건 주요일지
· 벼꽃축제위해 강제철거 항의노점상 분신
- 2 면 · 군산은 지금투쟁중...②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
· 단식농성단 13일 해단식-정부 인권법 철회 농성에 지지 잇달아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발족
- 3 면 · CBS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6일부터, 생존권 보장-부실경영자 문책 요구
· 환경단체 "먼저 공사중단하라"-새만금 민간조사위 원칙 제안
- 4 면 · [인권주평] 체벌, 교권의 확립인가? 인권침해인가?-윤찬영

제143호 (99.4.20) / 539

- 1 면 · SOFA개정 이뤄질까-홍순영 외교통상장관 '개정' 촉구
· "정리하고 중단하라" - 민주노총 4-5월 총력투쟁 결의
· '디스켓 조작수사' 의혹-울산대책위 사건조작 거듭 주장
- 2 면 · <기획> "군산은 지금 투쟁중"-정리하고 철회를 위한 기아특수강 대책위
· 도내 사회단체 '달러의혹' 규탄성명-유지사 '현금12만 달러' 비축 의혹
- 3 면 · 인권법 관련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
을 마치며
- 4 면 · [기고]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려워하는가?-김승환

제144호 (99.4.27) / 543

- 1 면 · 강압에 꺾인 노동자 생존권-정부 총체적 탄압에 지하철파업 막내려
- 2 면 · 폭음 · 조산 국가배상 불인정-배상심의회, 유탄발사한 미군책임 외면
· "지하철파업 정당하다"-민주노총전북본부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
· '영남위' 박경순씨 구속중 모친별세-대책위 구속집행정지신청 내기로
- 3 면 · "강패 잡을 때 쓰던 폭력 이제는..." 경찰, 사회단체 활동가 폭행

- 지하철파업지지 각계 성명서
- 4 면 · [인권주평] 피문은 만두-고홍석

제145호 (99.5.4) / 547

- 1 면 ·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 발족-전북 15개 사회단체 4일부터 본격 활동
· 집회장에 007등장-비디오카메라 뺏기고 도주
· 전주시민회 <언론학교>
- 2 면 ·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를 -공추위, 70개 단체로 확대개편
· "유지사 도민에게 사과해야"-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발표
· 노동자출신 양심수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 결성된다
- 3 면 · 기아특수강 체불임금 청구소송 승소-'단체교섭합의서' 위조 사실상 증명
· '사장퇴진' 요구-CBS노조
·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안 국회통과
- 4 면 · [인권주평] '유예된 행복' 청소년기의 운명인가-이재천

제146호 (99.5.11) / 551

- 1 면 · 병원인력감축 환자만 붓!-도내 보건의료노조 일제히 파업예고
- 2 면 · 군산우리땅찾기 1주년-SOFA개정투쟁 벌이기로
· "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99년 1차 민중대회 15일 열려
· 노사 개혁특위 구성 등 합의-<기독교방송 노조>파업철회
- 3 면 · 경찰, 관명사칭 정보사찰-"구청 총무과 이×× 주사다"
· 근로감독관 농성장에 음주운전 질주-노동자들 편파행정 항의 단식농성
· 검찰 뒤늦게 공소변경-<영남위 사건>
· 서진청 회원 6명 구속
- 4 면 · <자료>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1주년 선언문

제147호 (99.5.18) / 555

- 1 면 ·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광주청 '회신' 기만적, 농성투쟁 장기화
· 정부 구조조정안 철회-전북대병원 · 남원의료원
- 2 면 · 생존권 쟁취! 민중연대-99년 1차 전북지역 민중대회
· '영남위'선고 이적단체 혐의적용
- 3 면 · <자료>'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요지-"불법 감청 · 촬영자료 증거능력 없다"
· "유공자 법안 폐기는 민주화운동 부정"-'특별법 전환기도 중단'요구 시민단체 성명
- 4 면 · [인권주평] 5·18민중항쟁과 실업자, 노숙자, 부랑인-이희운
· 각계 인사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어른수렵 위한 공청회부터 거쳐야"

제148호 (99.5.25) / 559

- 1 면 · 미국, 학살승인 사과해야-'반미의 날' 군산기지 항의시위
· 부산서도 끈질긴 '우리땅 찾기'-미문화원 반환계기 시민운동 활기
· '불법'에는 공정한 엄단?-악덕사업주 구속보도에 이은 노동운동가 구속보도

- 2 면 · 위장 휴 · 폐업 뒤 인수 수순?-군산개정병원 이사장의 '이상한' 휴업
· 【인권비디오】 전세계 학살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 "칠레전투"
- 3 면 · 처우개선 · 보안법 폐지 등 요구-광주교도소 미결 학생양심수들 단식투쟁
· "국회차원 진상규명 시작하라"-'영남위'사건 가족들 국민회의 울산지부 농성
· 종교계 1080명 인권선언-"아직도 양심수 가두는가"
- 4 면 · [인권주평] 배고픈 자의 생존권과 배부른 자의 재산권-윤찬영

149호 (99.6.1) / 563

- 1 면 · 모든 국민은 예비범죄자?-정부 새주민증 위해 지문강제채취
· 법무부 '영남위' 분리수감-상고심 앞둔 구속자들 항의 목살
· 보험료 인상 철회 촉구-의보연대 정부대책 촉구 성명
- 2 면 · [기고] '건강권' 말하기 부담스러운 사회-서소영
· "파업권 보장 · 정부 강경대응 철회"-민변 대정부 시국견해 발표
- 3 면 · <자료> 근대국가의 정당화로서 기본권과 인권-한스요르그 잔트켈러
- 4 면 · [인권주평] 종교단체-인권의 보루인가, 사각지대인가-김의수

제150호 (99.6.8) / 567

- 1 면 · 출소 장기수 복송을 -종교계 "인도적 견지에서 마땅히"
· '노동자 연대' 입막음-<국제사회주의자> 잇단 구속
· 전북 인권소식 한눈에-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 단장
- 2 면 · 신자유주의가 환경재앙 부른다-세계 환경의날 기념 초청강연
- 3 면 · 새 정권들어 집회 · 시위 자유 악화-<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문목사 회고모임 귀국자 연행-대책위 사법처리 반대
- 4 면 · [인권주평]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시작하며-오두희

제151호 (99.6.15) / 571

- 1 면 · 파업기획도 모자라서-국민회의 항의방문 7명 강제연행 뒤 석방
- 2 면 · 통합 · 전산화되는 주민증, 정보사회과시즘 위험 - 정보통신연대 INP '주민전산화' 토론회
· 군산노동부 앞 80일 천막철수-<연대투쟁 통해 일부 복지약속 등 승리>
- 3 면 · 임금포기는 노사협의 거쳐도 무효-<자료>기아특수강 체불임금 소송 판결문(요약)
- 4 면 · [인권주평] 별레로 살다간 한 인간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 읽기-박병덕

제152호 (99.6.22) / 575

- 1 면 · 전북 노동자 단식농성-"정리해고중단, 검찰공작 사과하라"
· 【현장스케치】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 2 면 · 하루빨리 조건없는 수배해제를-60여 YS시절 정치수배자 300여일 농성
· 체불임금 달라는데 폭력강제?-기아특수강, 해고자 폭행!
· 【DJ정부 1년, 국보법 보고서】
- 3 면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4 면 · [인권주평] 신 미일안보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제정은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선전

포고!-방용승

제153호 (99.6.29) / 579

- 1 면 · 미군이 평화를 위협한다-25~28일, 미군기지 대응 국제회의 열려
· 용역깡패 쓸 돈은 있나-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자극 집단폭력사태 유도 의혹
- 2 면 · "또 하나의 불평등 협정"-민교협, 한미투자협정 반대 성명
· "현정부 총체적으로 문제"-25일, 전국사제단 성명 발표
- 3면 4면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②대한민국

제154호 (99.7.6) / 583

- 1 면 · "지문날인을 거부한다"-각계인사 성명 · '운동본부' 결성될 듯
·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거센 탄압 맞서온 전북대노조 '결성10주년' 맞아
- 2 면 · "한시적 특검제 안된다"-전국 197개 단체 국민행동 나서
· 소규모학교는 구조조정 희생양-31개 교육시민단체, 대규모 항의집회
- 3 면 · 서준식씨 선고 무기한 연기-인권단체들 "무죄석방" 촉구
· 여성인권 걸림돌에 '박충근 성희롱 검사'-전북여성단체연합 올해의 걸림돌 · 디딤돌 선정
- 4 면 · [인권주평] 시장독재에 맞서 싸워야-고홍석

제155호 (99.7.13) / 587

- 1 면 · 문정현 신부 단식농성-해고자 복직 · 공안탄압 중지 요구
· "내 몸이 상해도..."-닷새째 단식농성 문정현 신부 인터뷰
- 2 면 · <비대위가 밝힌 점 · 경의 '노동탄압공작' 사례>
· 장애인 노점상 분신 숨겨-단속중지 · 압수품 반환 등 요구
- 3 면 · 말로는 사면 몸으론 탄압-김대통령 '자유메달' 수상 이후
· 서울대 '인권문화제'-국정원 프락치 공작 규탄
· 전주교구사제단 SOFA개정투쟁 나서-미군기지 앞에서 길거리 미사
- 4 면 · [인권주평] 김대중씨가 자유메달을 받았다?-리수현

제156호 (99.7.20) / 591

- 1 면 · "원직복직" 연대투쟁-도내 연일 공안검찰 · 경찰 규탄대회
· 서해병원 이상용 원장 폭력배 자임-노조측 협상대표자에 허리띠 휘둘러
- 2 면 · 또다시 불붙는 예바다-96년 이후 투쟁 1000일, 해결된 것 없어
- 3 면 ·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대회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4 면 · <조작간첩 양심수 이화춘씨 옥중편지> "감옥 사정 달라진 게 없다"

제157호 (99.7.27) / 595

- 1 면 · 안풀린 의문사 진상-'평화와인권' 교도소장 상대로 소송
· "지문날인은 반문명 제도"-지난주 도내 첫 '지문날인 반대' 캠페인
· 학내에선 활동 못한다?-도교육청 학교장에 공문 시달

- 2 면 · “하늘같은 분이 어떻게...”-기아특수강(주) “면담은 아무나 하나”
· 보안법 철폐 · 동포돕기 강조-’99 통일축전 전북추진본부 결성
· 거부해도 뚝뚝하다-인권단체들, 지문날인 거부 서명자 모집
- 3 면 ·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 【현장인터뷰】 현자서비스 전북지부장 박종철씨
- 4 면 · [인권주평] 인권과 복지에 대한 신창원의 역설-윤찬영

제158호 (99.8.2) / 599

- 1 면 ·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의혹-기무사 · 경찰, 군인 등 원광대 출신 11명 조사
· ‘양심이 그를 가두고 있다’-양심수 이화춘씨 석방촉구 기자회견
- 2 면 · 【현장인터뷰】 ‘군산개정병원 김은혜 위원장’
· 대호물류 군산출장소장 실형 선고-사장은 도피행각 · 풀어야 할 문제 산적
- 3 면 · 인권 3법 제대로 만들어야-평화와인권, 의문사특별법안 등 문제점 지적
· 주민증 갱신 강요-게시 · 방송까지 “너무한다”
· 조건없는 전원 석방을-전북연대회의 8 · 15석방촉구
- 4 면 · [인권주평] 외국인 노동자, 3종의 착취대상-이희운

제159호 (99.8.10) / 603

- 1 면 · 도내 경찰폭력 기승-평화집회에 폭력일관, 부상자 속출
· 군산미공군 문정현 신부 외 2명 불법연행 · 감금-1시간 감금, 성적모욕 등 ‘심각한 인권유린’
- 2 면 · “전주시도 해제 반대해야”-‘전주권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결성
· ‘동성애=변태성욕’?-동성애자 인권연대, 교과서 수정요구
· 자주대오 재건위 ‘조작’ 규탄
- 3 면 · 책임회피에 폭행까지-고 이상관씨 유족들, 규탄 철야 농성
· 【현장인터뷰】 기아특수강 해복투 조성옥씨
- 4 면 · [인권주평] 자연 태풍과 사회 태풍-김의수

제160호 (99.8.17) / 607

- 1 면 · 최호경 이화춘씨 석방-8 · 15 사면, 정치수배자도 준법서약 요구
· 미군 공여토지 일부 반환결정 환영할 만한가-“한미행협 개정이 해결책”
- 2 면 · 조성만 열사 추모비 제막식 추모사
- 3 면 · 국회 통과 앞둔 국민의 정부 악법들-사립학교 등 교육관계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인권위원회법안
· 사람을 찾습니다-지문날인 헌법소원
- 4 면 · [특별기고]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묻자-문정현

제161호 (99.8.24) / 611

- 1 면 · 전국여성노조 29일 창립-비정규직 일용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목표
· “김현철이 독립운동가 쯤 되나”-국민회의 도지부농성 등 사면반대 행동 잇달아
- 2 면 · 【독자편지】 [평화와인권]에게 드리는 글

- 국보법개정 반대서명까지-민가협 등 한나라당사 앞 항의시위
- 3 면 · “정신지체인도 당당한 시민”-강제불입수술에 대한 공동성명
· <자료> 8 · 15석방 양심수 기자회견문
· 사람을 찾습니다-지문날인 헌법소원
- 4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교육①BK 21 무엇이 문제인가?

제162호 (99.8.31) / 615

- 1 면 · 보안법폐지 요구 삭발-국가보안법 전면철폐 힘찬 결의
· “국가보안법 폐지”-천주교연대 전국순회투쟁
· 국정원, 김영환씨 가혹행위
- 2 면 · 공안사범 길들이기 패싸움 유도-부산구치소 재소자, 변호사 통해 양심선언
· 【인권비디오】 동창회-소위‘영남위원회’ 사건
- 3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교육②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변화
- 4 면 · [인권주평] 일본은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가-이재천

제163호 (99.9.7) / 619

- 1 면 · 술판 경찰 적반하장-취재기자 ‘공무집행방해’ 고소
· 보안법 적용 이적단체 판결-‘영남위원회’ 대법원 판결-디스켓 증거능력은 부인
- 2 면 · ‘잊지말자! 공권력 투입’-만도기계 익산지부 ‘가족과 함께’ 행사
· 교육관행 해결 쉽지 않을 듯-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과 첫 교섭
- 3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교육③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변화
- 4 면 · [기고] 시민사회단체의 친관료적 명사화를 우려한다-이재천

제164호 (99.9.14) / 623

- 1 면 · 천주교 사제들 삭발단식-국보법 폐지 요구 명동성당에서 8일제
· 【인터뷰】 삭발단식투쟁 리수현 신부
- 2 면 · 노조, 감시 · 공작 대상 여전-현자서비스 97년 치밀한 직원사찰 자료 들통
· 연대의 힘으로 승리-군산카캐리어노조, 전원복직!
- 3 면 · “연대해서 풀자”-투쟁사업장 연대집회 가져
· 시작은 화려했는데-전북경찰 인권보장위 뭐하나
· SOFA 전면 개정하라-강제구금 · 민간인 탱크조준 규탄
- 4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보건의료①김대중정부 공약 얼마나 지켰나

제165호 (99.9.20) / 627

- 1 면 · ‘국보법 폐지’ 도내 확산-사제 등 10여명 단식농성-대규모집회
· 인권보장위 두 번 열렸다
- 2 면 · 일보전진 위한 한 걸음-호주제 폐지 위한 토론회 열려
· 인권침해 현장을 찍자-인권영화제 ‘카메라 인권지기’ 공모
· 통신공간 감청도 심각
- 3 면 · <자료요약> 저소득층 및 실직노동자 실태조사-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분

석

4 면 · [기고] 민족화해를 원하는가?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을 철폐하라-홍근수

제166호 (99.10.5) / 631

- 1 면 · 노조비리· 불법 위험수위-J여객 위원장 횡령 피소-'퇴진' 물러
· 더이상 침묵 앉겠다-천주교 전주교구 보안법폐지 운동 선언
· 경찰, 노조간부 부인 통화도 감청
- 2 면 · "노근리 학살 정부가 조사하라"
· 소파개정 거둬 촉구-시민모임, '불평등 관계' 홍장관 발언지시
· 민교협, 사제단 단식투쟁 지지선언-"국보법은 칼과 황금 지키는 폭력"
- 3 면 · <토론회> 전주지역 실업자와 건설노동자 실태조사-장기실업·불완전고용 문제 심화
- 4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보건의료②'이상관투쟁' 통해 본 노동보전 운동

제167호 (99.10.12) / 635

- 1 면 · "이번 국회에서 폐지될"-도내 19개 종교단체 40일 단식투쟁 돌입
· 소파 이젠 바꾸자-소파개정 국민행동 출범
· 【인터뷰】 우린 너무나 선량한 시민 아닌가-국보법 폐지 단식 결단한 박상희 목사 인터뷰
- 2 면 · 청와대 경호원들, 세계NGO대회장서 평화시위대에 "죽여버리겠다" 행패
· 노근리 학살 철저규명 촉구-<소파 국민행동> 성명
· 민변, 정간법 개정 촉구-"재벌의 언론소유 제한" 등 국회의장에 보내
- 3 면 · 나를 관찰하는 이유 밝혀라-보안관찰 피처분자 집단적 정보공개청구 채비
· 줄속 교원수급정책 철회 요구-전교조 전북지부 초등교사 결의대회 열려
- 4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보건의료③민중의료연합 강동진 대표 인터뷰

제168호 (99.10.19) / 639

- 1 면 · 대책없는 내년 실업대책-국방 치안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
· "의보통합해야 건강권 찾는다"-민주노총·농민 연대집회 이어 통합연기 반대 성명
· "파업보도 불공정"-한라중 노조 '입장' 발표
- 2 면 · 70%가 '노동조합 필요' 응답-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 발표
· "국보법은 노동자 세력화 걸림돌"-지난주 범국민 행동의 날 '국보법 폐지' 촉구
- 3 면 · 인권법도 '악법' 반열 오르나-인권공대위, 인권법안 문제제기
· 인권단체는 어떤 인권위 바라나
- 4 면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사회복지①못가진 자와 연대하지 않는 정부
· 【성명서】 정부·여당은 의보통합시행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제169호 (99.10.26) / 643

- 1 면 · 집회 제한 대폭 강화-집시법시행령 구호·확성기·유인물 등 제한
· <자료> 집시법의 주요내용
- 2 면 · "법정노동시간 줄여야 한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 3 면 · 교육현안 외면 단체교섭 안된다.-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 규탄농성 돌입
· "한라중 공권력 투입반대"-전북민중연대회의 성명
· "인권대통령 허구"-민교협 등 국보법 폐지 촉구
· '국보법 폐지 현수막' 절도 주범은?
- 4 면 · [특별기고] 시민세력의 확장과 지역주의 극복-김의수

제170호 (99.11.2) / 647

- 1 면 · 해고자 밀착 미행 의혹-기아특수강(주) 용역경비 해고자에 붙들려
· "실업자도 평등한 시민"-'권리선언'등 새 발걸음-전주실업자학교
- 2 면 · <요약> 실업자 권리선언
- 3 면 · "국보법 폐지" 요구 확산-종교계 이어 도내 교수들 농성·143명 서명
· '고문처벌' 시효 없애야
· "교육청 교섭의지 회박"-전교조 '성실교섭' 촉구
- 4 면 · [특별기고] 집시법시행령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전준형

제171호 (99.11.9) / 651

- 1 면 · 제정 이래 폐지운동 최고조-전국에서 도내까지 "국보법폐지" 한목소리
· 인권영화로 20세기 돌아본다-제4회 인권영화제-전주, 11월 27일 개막
- 2 면 · <자료요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주·군산)
· 99년 국정감사자료집 발간
- 3 면 · 【인터뷰】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 맞는 문정현 상임대표] "불평등 바로 잡는데, 치열 해야..."
· "소파 이렇게 바꾸자"-국민행동 '개정안' 방향 내놔
- 4 면 · [특별기고] '실업'과 실업 단체의 딜레마-탈출을 위한 비판-이창석

제172호 (99.11.16) / 655

- 1 면 · 목살당한 노동자 단결권-익산시 노조신고증 교부않고 문서위조 의혹
· 일본 산별노조 방문-"민주노총 등과 연대 지속"
- 2 면 · 인권영화로 돌아보는 20세기
· '준법서약제폐지'주장에 가석방 취소
- 3 면 · 【인터뷰】 40일 단식 36일째 전북종교인협의회 한상렬 목사 "국보법 없애도 안보 지장없다"
· 종교계, 국보법 폐지운동에 앞장-도내 기장교회 "폐지" 촉구
- 4 면 · [특별기고] 군산지역 빈민(운동)은?-백상현

제173호 (99.11.23) / 659

- 1 면 · 한상렬 목사 44일째 단식-국보법 폐지 단식기도 계속하기로
· 미국무부 "국보법 표현의 자유 침해"-호남사회연구회 '국보법의 악법성' 토론회
- 2 면 · 인권영화로 돌아보는 20세기
- 3 면 ·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97년 시작-민항사용료에서 소파개정까지
· <자료> 100회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 선언문- 불평등한 한미관계 지속되는 한 금요집회

계속된다

4 면 · 인권영화제로 오세요

제174호 (99.11.30)

/ 663

- 1 면 · “실업예산 오히려 증액해야”-도내 실업단체들 상경투쟁 · 각계 서명 전달
· 【성명서】 실업예산 삭감에 결사 반대한다
· “민주주의 · 인권 역행”-국보법 51년 <철폐연대> 성명
- 2 면 · 이근안 정형근 등 고문범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기자회견-‘고문범죄 진상규명 ·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 3 면 · 전교조 전북지부 비리고발 접수-사학운영 교원인사 등 고발창구 통해 접수
· “공익우선, 개인자유보장 사회”-<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29일 창립
· “전력산업 분할 · 매각 반대”-‘전력 공대위’ 명동성당 농성
·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4 면 · [특별기고] 너무나없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이재천

제175호 (99.12.7)

/ 667

- 1 면 · 경찰, 집회신고때 각서 요구-강한 항의받고 “강요 아니다” 뒷말
· 국보법 사실상 현상유지-전북연대회의, “개정추진 기만적”
- 2 면 · “WTO가 가난한 사람 만든다”-민중연대회의, WTO 뉴라운드 중단 촉구
· 교육개혁 ‘전북운동본부’ 발족-전교조전북지부 등 17개 단체 가입
- 3 면 · ‘국보법 개정’ 시늉만-김대통령, 본질적 개정의지 안보여
· “실업자에는 사형선고”-‘정부 실업예산삭감’ 반대 시위
· 학살 진상 규명 등 촉구-지난달 동아시아 학술심포지움
- 4 면 · [특별기고] 황당한 경험, 집회신고에서 ‘각서’까지!-이창석

제176호 (99.12.14)

/ 671

- 1 면 · 새 세기는 ‘인권의 시대’로-‘인권의 날’ 맞아 인권단체들 5대현안 권고
· ‘전북교육운동본부’ 발족-11일, 전교조 등 24개 단체 참여
- 2 면 · 민중대회 경찰폭력 다수 부상-인론에선 “학생들끼리 서로 밀리다가”
· 울산에도 민가협 생겨-양심수석방-수배해제 활동 벌이기로
- 3 면 · 한국통신, 노조선거 개입의혹
· 전북대, 아전인수식 ‘단협해지권’ 해석-전북대 노조 5개월째 파업
- 4 면 · 【성명서】 세계인권선언 제51주년을 맞이하며 -전쟁과 억압이 종식되는 미래를 위해
· 민노총 익산역 천막농성-18일 국회폐회까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 요구

제177호 (99.12.21)

/ 675

- 1 면 · 2000년엔 주5일 근무를-민주노총 개혁입법 처리 촉구
· 인권법 연기될 듯-정책위 의장 공대위에 답변
- 2-3면 · <평화와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뉴스
- 4 면 · [특별기고] 부업은 일하는 것이 아닌가-박미란

평화와인권

94년 7월-12월

준비1호-18호

평화와인권

준비 1 호 (94.7.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준비모임)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전북지역 각계인사 '비상시국선언' 발표

핵문제 평화적 일괄타결, UR 국회비준 거부

전북지역 재야인사와 학계, 노동, 종교계등 각계인사 3백69명은 6월 26일 현 시국과 관련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북핵을 빌미로 진행되는 김영삼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증지등을 촉구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악순환을 계속한것은 서로 불신하고 협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은 [일괄타결]만이 북,미간의 핵문제를 푸는 방법이므로,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은 3단계회담을 하루 빨리 재개할것을 요구 했다. 또한 민족의 생명이 걸린 UR협상안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임하여 우

리농업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선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내 국회에서 비준이 어렵게 되자 이미 내년으로 비

준절차를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할 경우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같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교황청 무기생산 비난

고용유지 명분도 비도덕

로마 교황청은 6월21일 독재자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부도덕한것이라고 비난했다.

교황청 '정의평화추진위원회'의 에체가레이 추기경은 무기생산으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도덕적 반성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추기경은 "무기 수출국들은 무기 사업을 정상적인 것, 또는 무역적자 보전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등으로 생각

해선 안된다"면서 무기산업을 다른것으로 전환할 경우 초기에 "엄청난 고용상의 손실"이 야기될 것이나 이같은 문제만으로 무기산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군수산업은 경제와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행사 안내 ○

◆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회원배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출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급증하고 수매는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문의 : (0652) 85-4205

◆ 전북 여성운동연합 7월 이야기 마당
일 시 : 7월 2일 (토) 오후 3시
장 소 : 전북여성운동연합 사무실
주 제 : 남,북한 통일경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주제발표 : 박종훈(전북연합환경위원장)

조선민족박해 규탄 작가회의, 민예총

민족문학작가회의 (대표송기숙, 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공동대표 열

무용등, 민예총)은 6월27일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본지식인단체 중심21을 비롯하여 일본대사관, 한일의원연맹,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등은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말했다. 성명서에서 또 "백주대낮에 소녀의 치마에 가위를 대고 린치를 가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해대는 원시적 야만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정부, 경찰, 언론은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남독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인의 조선인 소녀학대는 1백30여건에 이르며 심지어 지난 6월 24일에는 14세의 소녀가 일본남자에게 발로 배를 차이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6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노동계 "3자개입 금지는 독재시대 유물"

공권력 투입, 언론편파 보도

철도 노동자들이 연중무휴로 한달 360시간(94년 1/4분기 우리나라 월 평균 노동시간은 190-200시간:노동부)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아 왔고, 96년 까지 5천3백여명의 대량감원 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1년에 약 20여명이 작업중에 사고로 죽고, 2백여명이 중상을 입고 있다. 휴일은 단 하루도 없이 24시간 맞고대기 일한다. 그러나 교대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어용철도노조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거의 무관심 하였다.

한편 개통된 직후부터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은 낙하산 인사등 전형적인 인사비리와 노동조건 악화로 여러번의 분규를 치러왔다. 지하철 노조는 해마다 시민편의 시설 종사자라는 이유로 연 3-5%의 임금인상에 묶여 왔고, 불리한 직급조정과 업무의 급격한 과중으로 곤란을 겪어 왔다.

이렇게 누적된 문제의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지협)와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는 6월 8일 쟁의발생 신고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공동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6월 24일 지하철 노조에 직권중재를 통보하고 '불법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고 농성장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여 3백여명의 노동자를 연행하고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의 대표들을 3자개입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배하였다.

이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는 "권영길, 양규현 전노대 공동의장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전노협은 6월29일 발표한

성명에서 "3자개입 금지조항이라는 녹슨 칼을 들이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행위"라고 주장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3자개입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킬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문제 전문 김선수변호사는 "직권중재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되는 마당에 '냉각기간'때의 쟁의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이 3자개입 혐의로 구속, 수배중인데, 이 법은 이미 ILO에서 규약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는 대표적인 악법 조항인 것이다. 한편 언론노련에서는 6월 29일 권영길위원장에 대한 사전영장발부에 항의, 1만6천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장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 갔으며, 언론사 노조위원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영신)가 중심이 되어 각 언론사를 방문, 파업관련 언론의 보도태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호주의 '자동차, 식품, 금속, 기계노동조합(AFMEU)과 일본의 영당지하철노조, 프랑스의 노동총연,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등에서 철도 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냈으며, AFMEU는 "한국정부가 구속된 노조지도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폭넓은인권신장 노력할 때

KNCC 인권위원회 20주년 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운동의 전망'의 주제로 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6월 27-28일 은양제일관광

주간 팩스신문 「평화와 인권」을 펴내며

시대는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의.평화정보센터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인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간 팩스신문을 발행합니다. 소박하게 준비호로 시작하는 「평화와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추구를 목표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소식지가 여러분으로 쓰임새가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 펴낸이 -

호텔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토론회에는 조희연교수가 '민주화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을 박원순변호사가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을 임태수교수가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을 발표했다.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 (요약) 박원순 (변호사)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의 주제 발표를 한 박원순변호사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인권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이다. 경제적 권리는 개별 국민의 일정한 사회적 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대한 권리, 의료시설 이용의 권리, 교육의 권리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권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요구등이다. 서방국가들은 경제적 권리에 우위를, 사회주의권에서는 사회적 권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 두 권리는 상호 연관성과 보완성을 지니며 이밖에도 '제3세계'인권의 개념이 분화, 발전되어 왔다. 원주민의 권리, 민족자결의 권리, 개발에의 권리, 식량과 자연에의 권리 등 주로 인종과 종족, 민족이라는 큰 집단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는 방치된 인권의 영역이 너무 많다. 일반시민의 인권으로서 관심 전환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 했다.

이제 인권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제기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권력이 국민 탄압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써 법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은 소송제기, 고소, 고발의 조직화된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는 학자들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따라야 한다. 인권침해의 폭로로 침해양상과 배경,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적 쟁송의 제기, 학문적 뒷받침, 대중화 작업이 3박자를 맞춰야 한다.

끝으로 세계의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나누는 '품앗이'가 요구되는데 그속에서 우리는 다른 곳의 인권을 향한 저항과 투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평화와 인권

준비 2호 (94.7.8)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준비모임)

발행인 : 문 규 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 요구 국제엠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별로 적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어느때 보다도 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인권운동가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는 더욱 증가했다"고 논평했다.

1백51개국에 대한 조사작업 결과 93년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고, 10만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엠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 이상의 수인이 사형집행 되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유엔에 약 9년만에 인권수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서 작성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한 해 2백50여명의 정치적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문도중 고문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또한 약 50여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한 국정부에 양심수 석방, 고문과 가혹행위 중단, 모든 고문 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형집행 중지와 함께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 정치적 수인의 사례에 대해 재조사 할것을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외 국인의 북한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 엠네스티의 독립적인 조사단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작업이나 감시, 구금장소의 방문을 위해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북한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나 재판과정없이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구금되어온 양심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고 전했다. 이들 양심수중에는 반체제인사의

친척이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백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센터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이전 수인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조건은 열악하며 수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례화되어 있고, 사형집행이 있으며 일부는 공개집행도 있었다고 전했다

『평화신문의 냉전논리』 '빛고을' 광주대교구보 논평

지난 6월 26일자 『평화신문』의 '학생운동이 선을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편파적인 시각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로 일관되어 있어 독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설은 6월 18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남측련 소속 대학생들의 이른바 '열차정지와 경찰감금 사건'에 대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조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학생운동이 독사처럼 머리를 뿔뿔하게 쳐들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당국은

고심거부하고

무차별 경찰투입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를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경찰병력을 투입, 대거 연행하는 사태가 잇따라 지 나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월 23일 새벽 전 기협 조합원들의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6개 사업장의 농성장 20곳에 경찰병력 2만2천여명을 투입해 1천8백18명을 연행하고 26명 구속, 46명을 수배했다.

공산주의 사상이 골수에 박힌 대학생들을 부리뽑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대교구보 '빛고을'에서는 최근 북한핵을 둘러싸고 전쟁 위기 부추기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국민과 고립시키기 등으로 기존언론들의 왜곡과 편파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것은 잘알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언론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흑백논리로 일관하는 사실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공식출범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역할 다할것"선포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민족회의)가 7월 2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출범해 통일운동이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통일운동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해 민족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교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전국 60개 재야 및 사회단체 및 발기인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통일운동이 대중의 일상속에 뿌리박고 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족회의가 이에 따라 민간통일운동의 명실상부한 대중적 구심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한 민족통일 실현 등 7개 항의 강령과 38개조에 이르는 규약을 심의, 확정했다. 참석자들은 또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상근 목사를 민족회의 상임의장으로 뽑았다.

민족회의는 이날 특별결

의문을 채택해 △ 8월 15일까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적극 실천등을 다짐하고 7월초로 예정인 북미 3단계 회담에서 핵무명정보장과 북미수교를 통한 관계정상화의 일괄타결을 남북한과 미국에 촉구했다.

범민련 관련 3명 구속 광주전남연합 오병운씨등

5일 오전 8시30분 오전 10시 사이 범민련 창립대회 참석등과 관련 오병운(38,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노동운동단체연합 의장겸 임)씨등 3명이 연달아 연행되었다. 오씨외에도 김세원(67, 광주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씨와 김양무(42,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장)씨가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은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어 현재 광주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7월 3일 오후7시경 춘천군 신북면 경춘공원묘원 옆 개사육장 부속사에서 임영재(56)씨가 숨져있는 것을 묘지관리인 조아무개씨(39세)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임씨의 시체에 길이 12센치의 흉기가 있고, 외상이 없으며, 반항한 흔적이나 다른 외상이 없는데다 월남전 참전자로 고엽제후유증 증상을 겪고 있는 하반신마비 증상이 자주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상처를 내 마비증세를 풀려다가 동맥이 끊겨 심한 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오던 임경옥(50세)씨가 한때 자신이 살았던 춘천군 사북면 빈집에서 고엽제후유증을 비판, 국악을 먹고 자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연행하면서 광주지역 범민련 광주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점을 압수했다.

한편 오후2시 광주전남연합은 비상집행위를 소집하고 "정부는 길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통일을 시도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이윤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조계사 농성장소로 첫 이용

한국불교의 본산이라 할 조계사가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농성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6월 27일 밤부터 전기업 파업 노동자들이 경찰

의 해산직전을 피해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 불교계를 신변보호용 울타리로 삼는 것이다. 조계종 개혁회의는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내치지 않는다"는 절집안의 오랜 전통에 따라 일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불교 사찰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너그러움의 품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7월 6일 철도노동자 2백여명이 불교인들을 위한 연비의식을 치렀다.

주간 소식지 「평화와 인권」을 펴내며.....

시대는 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의평화정보센터'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인 인권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소박하게 준비호로 시작하는 「평화와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추구를 목표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여러분께 쓰임새가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 펴낸이 -

평화와 인권

준비 3호 (94.7.1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준비모임)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민가협에 따르면 과거 시국사건으로 안기부등 수사기관에 연행된 고문을 당한 66명의 양심수들이 7일 고문수사관들을 처벌하라며 집단적으로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중 현재 48명은 고소소에 수감중이다. 서울지검을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양심수들은 양동화(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무기)씨등 장기수 20여명, 송갑석(전대협 의장)씨등 전대협 관련 8명, 박기명(박노해)씨등 사노맹 관련 16명, 손병선씨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관련 20여명 등이다. 이번 집단 고소와 관련 민가협은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위한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면서,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문에 의해 조작된 장기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년 10월경 반계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한 박충렬씨등 12명이 89년 1월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으며, 89년 안기부에 연행된 고문을 당한 홍성담, 차일환씨의 경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홍성담씨는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몸타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가협은 검찰이 과거의 인권범죄를 처벌하기 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고소장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인도적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렬씨등 3인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차질없이 진행돼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공동대표:문규현,홍근수)은 7월 11일 김일성주석의 사망에 부쳐 '남북정상회담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때 전쟁분위기로 치달아 악화일로를 견딘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대화와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김일성주석의 사망에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부당국, 언론, 국민 모두가 모처럼의 대화분

위기와 평화통일의 기회를 헤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당부한다고 부각했다.

그리고 김일성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을 앞당기고 민족통일을 여는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의 권력승계가 끝나면, 승계자와의 남북정상회담은 일정상의 조정을 빼고는 영향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측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 모두가 모처럼의 대화분

여성노동자 여전히 저임금 - 불안정고용도 큰문제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회장 이영순)는 최근 기술교육제도와 직업훈련기관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발표한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성별분업구조등으로 여성노동력은 여전히 저임금, 단순직, 불안정한 고용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여성노동자 지원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성기능인력 양성 및 성별분업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실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요구도에 비해 모집과정, 운영방식, 직종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남성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여성인력을 종전처럼 단순기능공, 유흥노동력의 임시직, 파트타임 등 저임금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인력 양성과 평생직장으로서의 방향,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즉 취업확대와 고용차별, 폐지 정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93년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 남한 요약

남한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만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여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속하였다. 처음 신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수정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취임 후 곧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3월에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에 '심각한 제한'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5월에 정부는 이조항을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8월 일련의 노동쟁의를 겪은 후 이결정은 반복되었다.

6월 정부는 UN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려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지난해 말까지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월 144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중에는 반정부간사들, 학생들, 노동자들 또한 장기수감되었던 나이가 많은 수인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십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여기에 많은 양심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반정부조직'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은 정부당국에 의해 '한국' 조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단체를 지지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3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이들중 일부는 사노맹과 관련이 없으며 양심수이다.

6월에 국가보안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조국 고수를 포함한 9명의 양심수인은 사회주의 과학원에 소속되었다는 혐의와 소위 사노맹과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황석영은 4월, 일정기간 동안 방북한 후 남한에 돌아와 체포된 양심수이다. 10월 그는 89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정부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돈은 '장길산'을 영화화하는 판권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운동가 노태훈은 7월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가 일본에 있는 북한간첩을 만났다고 자백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당국은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책과 팸플릿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용되는 자료이다. 노태훈씨의 인권활동이 그를 체포한 진짜 이유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의 장기수를 도왔고,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세계인권회의 남한 NGO대표로 참석하였다. 그는 10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7월, 8월 군정집자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군을 탈영하여 '양심선언'을 하였었다. 일부 사건은 89년 이전의 사건으로 군대 개선을 요구하고 남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경우이다. 대부분은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는데, 이들은 양심적 이유에서 이를 거부 하였다. 8명중 4명은 1년6월에서 3년까지 감옥형이 선고되었다. 나머지는 군대나 전투경찰로 되돌려지고 있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은 제3차 개입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7월 전국노조협의회 의장인 단병호씨를 포함하여 지도자들이 임금협상과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은 은신하였다.

이전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수십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년과 80년에 북한과의 접촉이나 간첩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심문 기간동안 고문을 받았고 대개 강요된 자백을 근거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 이들 중에는 85년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김성만과 20년형을 선고받은 황대권이 포함되어 있다. 장의균은 87년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

받았다. 4월에 임의적 구금에 관한 UN 실무분과는 이들 3사인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수감된 두명의 수인을 석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위 공산주의 견해를 철회한다는 '전향서'를 쓰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심수로 간주된다.

10월 국회법사위원회는 91년 강기훈에 대해 한 정치활동가의 자살을 선동하거나 조력했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시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이후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는 재심을 위한 합법적 범주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강기훈은 계속 복역중이다. 그의 체포와 형의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심수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치적 동기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소위 안기부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장기 심문, 잠 안제우기 그리고 위협을 받았다. 일부 수인들은 심문과정에서 구타당했거나 반복적인 물리적인 훈련을 강요 당했다. 평화론자이고 인권옹호론자인 김삼석은 그의 변호사에게 9월 체포된 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의해 웃을 벗기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그의 여동생 김은주는 성장없이 체포되어 이틀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들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일본에 있는 '반정부 단체'와 접촉했고 국가기밀을 넘겨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11월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고문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수의 사색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12월에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모든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화와 인권

준비 4호 (94. 7. 25)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주소 : (576-010) 김계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사제단 "박흥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
한교협인권위, 한총련등 "사과해명 요구"

AI, '조문' 관련대량구속
'표현의자유' 침해우려

북한 김일성주석 조문문제에 마녀사냥 바람이 또 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 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 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김병상 신부등, 사제단)은 21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흥신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편견과 무지에 의한 것"이고 "청와대발언과 이후 기자회견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제이며, 대학총장인 지성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을 이탈한 망상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한총련이 주사파들에 의해 조종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민족의 현실을 고쳐하는 청년학생들의 자치적 결사라고

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상근)도 이날 '박흥총장의 청와대 발언과 경찰의 연세대 도서관 난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91년 유서대필사건 때 그의 말이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되었는지 기억에 생생하다"며 "박신부는 성직자와 교육자로서의 이성을 찾아 제자들하고 학부모,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교협인권위는 "현재와 같이 공안정국을 유발하여 구속, 무력진압만을 통치수단으로 하는것은 5.6공 시대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

장 하였다. 한편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민가협)은 박흥총장의 발언은 학생을 책임져야 할 스승으로서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운동을 가리켜 북의 지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논리는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시키기 위해 사용된 낡은 수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5백18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고, 날마다 각 대학과 노동현장에 공권력 투입과 불법연행, 구속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총련은 박흥총장을 한총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편집방향 재검토 촉구"

-사제단, 평화신문 발행인에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단)은 18일 평화신문 발행인에게 "최근의 평화신문 사설등이 교회의 언론으로서 자기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편파적, 비복음적 편집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잘못된 사설(6월 26일, 7월 3일자)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집필자와 실무책임자의 인사조치 및 편집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

를 요구 하였다. 그동안 평화신문은 교회의 언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임장이라는 데 심사숙고하여 보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라는 허위의 대울로기와 물가치적인 보도 태도로 존재의 필요성에 강한 회의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복음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20일 북한의 김일성주석 사망후 한국에서 수십명의 학생과 반대자들이 조문을 표하려 했거나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엠네스티는 지난 13일과 16일 서울과 광주등에서 80여명이 넘는 한총련 학생들 연행, 강의남독사등 법민권지도자 구속 등의 예를 들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거나 연행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평불협 법타스님 구속
- 회보내용 문제삼아 -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회장 송월주, 평불협) 부회장 법타스님이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법타스님의 구속사유는 평불협회보 11호에 김일성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 부분을 게재한 혐의다. 그러나 평불협은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평불협회보 12호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공안정국 구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회보를 이유로 구속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였다.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 중재재판소 회부 촉구 국제여론 환기위한 '민중재판' 추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제등, 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대협은 20일 기독교회관에서 무라야마 일본수상의 방한을 앞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센터기금'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국

제 법질서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에 응할것을 촉구하였다.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중재판(Permanent People's Court)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회원국 외무부장관과 민간단체들을 상대로

전후문제 처리없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아시아 교류센터 기금안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상규명과 개인배상, 책임자처벌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12백 27차 수요시위를 가졌으며 오후 2시에 는 청화대 앞에서정신대 할머니들과 집회를 가졌다.

는 노동자 대표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해, 위험물질의 게시와 교육의 내실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청구권의 구체화등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산재보험 재정운용 "노동자 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 예방 계획과는 모순된다는 .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 회(김병오)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건강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씨는 연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을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산재보험 운용주체 논의에는 반드시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

노동자, UR비준반대 여론투표90% 한목소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는 UR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국민의견의 수렴 없이 추진된다고 판단, 지난 6월 10,17일 이틀에 걸쳐 UR 국회 비준에 대한 노동자 여론 조사 투표를 가졌는데 그 결과 90%에 가까운 조합원이 국회비준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투표는 모두 2백77개 노조에서 실시 됐는데 대상 조합원 14만4천8백5십9명 중 10만2천87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반대가 89.2%인데 비해 찬성은 9.5%인 9천6백7십9명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94.7%에 이어 광주, 전북, 인천, 대전 등 주로 호남권과 수도권에 반대표가 많았다. 산업별로는 섬유가 96.9%로 가장 높았으며, 출판 유통 통신 화학순이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국제중재재판소란?

국제중재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국제분쟁평화처리조약에 두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선택이 있다. 93년 7월 '국가와 개인간의 선택규칙'이 제정되어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은 이 규칙에 따른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와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 했다.

평화와 인권

준비 5 호(94.8.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철도, 지하철 보복징계, 재파업 부를수도

징계 총 3270명, 노조활동 '목조르기'

최근 철도 노동자들과 지하철노조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 지하철이 최근 파업관련으로 각각 1천8백8십8명과 7백4십4명이 징계조치 당했으며, 철도기관사들도 모두 6백3십8명이 징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하철공사측이 노조간부 40여명에 대해 4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합비와 노조간부의 퇴직금, 부동산까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철도청도 연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수배중인 서선원(전기협 비대위원장)씨 등 전기협 비상대책위 지도부 6명의 서면진술서를 대신 제출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철도청에 간 남진우 (32, 전기협 천안지부비대위원장)씨가 26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선스님(불교인권위 홍보부장)과 전기협 조합원 등 4명이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지방공안청 공안관실로 찾아가셨으나 7명의 공안원들에 의해 폭행과 감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철도와 지하철의 수배자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여러가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배

자의 경우(이상록, 지하철노조) 신원불명의 사람이 잠겨있는 이씨의 반집에 무단 침입해 수색했으며, 경찰이나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수배자의 친구와 친척집에 찾아가 자수할 것을 반협박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대량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와 공사측의 탄압에 재파업으로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5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끝이은 전체조합원 총회에

서는 재파업을 결의하면서 *41명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대량징계 백지화 *손해배상청구 취하 *무노동 무임금철폐와 정상임금 지급 *고집에 즉각인할 것 등을 공사측에 촉구하였다.

한편 불교, 천주교, KNCC 등 3개 종단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천주교 여의도 성당에서 국회내노동환경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진우씨등의 구속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세계가 손가락질한 노동정책

국제연로연맹 정부예향의, 가톨릭단체 인권문제 무관심

정부는 최근들어 노동정책과 관련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들어야 했다. 비록 남북정상회담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따른 사회 전반의 들뜬 분위기로 모면하기는 했지만, 한국이 인권, 복지 문제에 관한 한 아직 후진국의 양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철도,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받은 항의 및 권고는 두가지이다. 그 하나는 국제연로연맹(IFJ) 사

무총장이 김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이고, 또 하나는 유엔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상임집행위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의이다. 지난 6월 29일 작성된 국제연로연맹의 항의 서한은 권영길 연노련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처럼 국제민간조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거나 세계적인 쟁쟁인을 벌이는 것은 이제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특

히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정치논리로 행동하는 정부에 비해 민간단체들이 인권 옹호에 훨씬 적극적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가톨릭교회에도 교황청대사 외에 국제카리타스,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가톨릭학생연합회 등 유엔에 등록된 공식단체들이 있으나 대부분 인권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교황청의 정책으로 활동침체 상태에 있어 국제여론에 대한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카리타스의 경우 전세계 가톨릭 사회사목을 대표해서 매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인도 하고 있으며 활동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발인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도 전혀 없는 형편이다.

전주지역 재해발생률 증가 제조업 217명

산업재해 추방의 달인 7월에 노조 및 노동단체들의 산재추방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주지역 제조업 분야 재해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체 노동자 11만4천1백23명 가운데 7백11명(사망 16명)이 재해를 입어 0.62%의 재해발생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3.13% 감소한 수치이지만, 제조업분야는 전년 대비 37.5%나 증가해 2백17명이 재해를 입었다.

'사회발전 한국포럼'결성 사회발전세계정상회담대비, 매달1회포럼개최

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WSSD)을 준비하는 '사회발전 한국 포럼'이 결성되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국내 민간 사회운동단체의 두번째 간단회에서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논의한 결과 매달 한번씩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포럼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WSSD)을 준비하는 '사회발전 한국 포럼'이 결성되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국내 민간 사회운동단체의 두번째 간단회에서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논의한 결과 매달 한번씩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포럼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처음부터 참여한 기사연,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환경운동연합, 평화연구소, YMCA, 경실련, 민정연 이외에 전교조, YMCA, 전민련이 처음 참가하였다.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요구

UR비준 강행철회,
케케묵은 이념시비중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윤정석, 전농)은 27일 전북도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쪽에 근본적인 재해대책 마련과 우무과 이라운드 재협상을 촉구했다.

전농은 이날 "대가문을 계기로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뜯어 고쳐 근본적이고 증상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농업 재해대책법을 전면 수정해 농업보호와 사회보장차원의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은 또 "기르에선 6백만 농민의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우무과이라운드 비준강행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와 민자

당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농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전농은 케케묵은 이념시비와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과 정확한 가뭄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는 정부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우무과이라운드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이 나라들도 국회 비준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준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일총리에 전후문제해결 촉구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방한한 23일 정신대배상등 전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태평양전쟁 피해자관련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이효제등)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공동대표:양순임등)등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무라야마총리의 숙소인 서울신라호텔 앞 장충단공원과 서울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무라야마 총리의 정신대문제 적극 해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교류센터 설립계획 철회 *일본정부의 개인배상 실시 *원폭피해자를 일본피해자와 동등 대우할 것 *정신대 배상등 전후

처리를 마무리 짓고 피해자 배상에 즉각 나설것 등을 요구했다.

문국진씨 고문희생자원호기금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f Torture)에서는 지난 5월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키로한 것은 국내에서는 고문후유증에 대해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사정에 비추어 불대문국진씨의 정신분열증이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인정한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재정까지 지원할 것을 결의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국진모임은 유엔인권센터에 문씨에 관한 재정과 캠페인, 사회복지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파격적으로 빠른시일에 결정한 것이다. 문씨는 지난 80년, 86년 체포당시 고문의 피해에 의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기록영화제작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은 정책화된 성문화에 의해 유폐된 여성의 역사인 군위안부 희생자 할머니들의 기록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평화와 인권

준비 6 호(94.8.29)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0658-45-0152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경찰은 24일 새벽3시경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중 법원으로 부터 정진상(경상대 사회학),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교수 등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진주경찰서 및 경남도경소속 3개중대 4백여명의 경찰은 이날 '한국사회의 이해' 폐간시도 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던 사회과학 도서관과 교수연구실에 진입하여 장 두교수를 찾았으나 교수들이 농성장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구인에 실패하고, 새벽4시 20분 경 철수했다.

농성중이던 교수들은 건물주위에 있던 학생들의 고향을 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구인을 당하지 않았다. 고내진입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진입으로 이를 막는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

검찰은 구인장 만료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구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을 않는 대신 자진출석을 중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

상대 민교협'은 성명에서 "경찰이 교수를 잡아들이기 위해 심야에 학원을 침탈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는 물론 군사정권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문명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야에 경찰을 투입하여 교수들을 붙잡아 들이려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검찰이 문명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균(서울대), 서관모(충북대)등 사회학 교수들도 24일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

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던 교수의 '교수권'과 '수업권'을 사법적 대상으로 침해하려 한다는 것은 최소한 해려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터' 강박폐강 철회 주력

폐강철회 밤샘농성을 10일째 벌이고 있는 장상환, 정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로 몰아 9명 구속 사민청 85년 결성, 유초하교수등 수배

안기부는 26일 새벽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의장: 홍승문, 사민청)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권오창(58, 사민청 지도위원)씨등 9명의 회원들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초하(충북대교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등 3명을 수

배하였다. 사민청 회원들은 "85년 창립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정치학교도 89년에 개설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왔다"고 주장하며 '주사파 조모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초하(충북대교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등 3명을 수

진상 등 8명의 교수는 26일 오후 4시 경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까지 검찰의 구인장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교수들은 "경찰병력이 신성한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다시 진입할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을 우려한다"며 구인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 활동의 초점을 폐강문제에 맞추고 있으며, 학교당국은 폐강조치를 철회하고 전체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관련, 8명 임용대상 제외

전교조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추가부직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면담회회 조차 주지 않은 채 이수호(94년 서울지부장)씨 등 해직교사 8명을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자체 인사위를 열고 2학기 추가부직 대상자 11명을 확정, 개별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전교조는 전남, 북등 타시도 교육청과는 구별되는 폐쇄적 관료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학기 추가부직 제외사 8명을 포함해 전교조 관련 누락자 26명,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등 2백30여명의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했다.

미국산 자동차 강제사용 항의 전노대, "관용차 미국제 사용압력 부담"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전노대, 공동회장 권영길) 소속 회원 10여명은 23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 모여 최근 미국측이 우리정부에 미국산 승용차를 관용차로 사용토록 강요한 것은 중대한 내정간섭인 만큼 이를 철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미대사관측에 요구하였다.

미국은 냉전 이후, 무기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책상 무기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다른 수출대용품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관용차 사용압력도 그러한 통상압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미국은 냉전 이후, 무기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책상 무기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다른 수출대용품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관용차 사용압력도 그러한 통상압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산재환자 최저보상기준액 1일 1만7천6백9원

노동부는 22일 저임금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하루 최저 보상기준액을 금년 상반기보다 7.83% 오른 1만7천6백9원으로 책정,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제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 장애인급, 유족급여, 장애비 등 산재보험급여에 있어 하루 보상금액이 최저보상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최저보상기준액의 수혜대상 재해근로자는 1천7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최저보상기준액의 인상으로 연간 21억원의 추가 혜택을 보게된다.

6공 공안정국의 희생자 강기훈 석방 "결백 밝혀 터"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6공 공안정국의 최대희생자 강기훈(31세)씨가 3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17일 만기출소했다. 강씨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반드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최근 주사파 관련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박홍총장에 대해 "3년전에도 '분신'의 비후에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서대필 사건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84 박총장의 말의 사실여부를 따지기 않더라도 교육자이자 성직자로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을 대서특필하는 언론매체의 저의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동규제 완화와 관련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노대'(공동회장 권영길)는 성명을 통해 "이는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재벌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장애인고용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앞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및 3백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두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고용률은 0.39%, 공무원 고용률은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더위에 치여 「평화와 인권」이 2주 동안 쉬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인권

준비 7 호(94.9.5)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소 : (576-010) 김계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 "청문회 거쳐 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오는 14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바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와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은 과거 권력에 영합하여 판결을 내린 사람의 헌법재판소 내정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관 소장 내정반대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 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 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

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포섭할 수 있는 법철학 및 헌법관의 소유자이므로 인품과 덕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9월1일 민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모든 국가작용에서 지켜지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회동의 과정의 의결정족수를 제적 2/3이상의 의결

을 거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참여 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면서 해결방안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것을 제안하였다.

한상희(경성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분석'의 발표에서 '6공화국 등장이나 3당합당 등의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석태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밀행성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재판관 임명에 있어 인선범위 추적이 어렵고, 임명내정자를 미리 알아내서 비판하는 수준의 참여방법 정도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기부 전부처 '사노맹' 회원 구속

'주사파조직사건'으로 조작우려

국가안전기획부 전부처부는 8월 26일 오전 6시경 전민중정당추진위 이리지부장 이화춘(36세)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해 조

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91년 7월경 '사노맹'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씨는 '사노맹' 가입후 이렇다할 활동을 한바 없이 조직활동을 정리하고 생업에만 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긴급구속한 것은 최근 박홍총장의 주사파 발언 이후 자행되고 있는 공안정국의 주사파조직사건으로 조작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씨의 구속사유증에는 이씨가 지난 90년, 91년, 92년 등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숙부를 4회 방문하고, 일화75

만엔(한화 약400여만원)을 받았으며, 숙부이화영(66세)은 지난 70년 울릉도를 거점으로 암약하던 간첩단사건의 제일 주모자이고 '한통련', 일본본부 중앙위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화영과 접촉,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족들은 "과거 이씨의 부친과 친척이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당한지 20년, 아직도 그 아픔이 생생한데 어떻게 국가변환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겠느냐며, 단지 숙부로서 만났고, 이씨의 생활편을 알고 어렵게 사는 이씨 가족의 생활보조금을 준것이라며, 20년전의 그 아픔이 재현될까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알 립 니 다 ◆

□ '정의구현 사재단' 20주년 기념 강연회

일시 : 1994년 9월 14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 강당
차면 :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출발지 - 오후 4시 30분, 나바위성당
2차 출발지 - 오후 5시 30분, 전주교구청
대상 : 수도, 성직자 및 명신도

복지판결 노동자 출근저지, 폭행 전주대성전자, 중앙노동위 명령거부

컴퓨터부품 생산업체인 전주대성전자(주)는 지난 8월 8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지판결을 받은 2명의 노동자(신규노조위원장 이정란, 부녀부장 신득주)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출근을 하려던 이들을 강제로 저지하려다 철계출입문이 넘어져 이씨가 척추를 크게 다쳐(천치3개월) 이리시 조영원 외과에 입원해 있다. 이씨등 대성전자 노동자들은 지난 4월 5일 노조를 결성하여 시청에 접수하였으나, 2년전에 회사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노조를 결성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어 이들의 신규노조설립이 반려되었다. 이에 이씨등 노동자

들은 기존노조가 2년 동안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휴면노조(유령노조)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조해산과 신규노조 인정을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 4월 13일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에 이씨등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중앙노동위에서는 '이씨등이 기존노조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취업규칙 위반을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복지판결을 내렸다.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 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의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 정무권(연대 행정학) 교수는 '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를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후

회보장 제도의 개혁은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시킴으로써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보장은 프로그램적 문제가 아니라 '권리'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은 2일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교류계획' 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평화우호교류계획"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대전50주년이 되기전에 전쟁범죄 인정, 전쟁기간중의 비인도적 행위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 중군위안부, 징용, 학병, 군속, 원폭피폭자, 사할린 잔류동포 등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중소기업 체불임금 크게늘어

올들어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경영난으로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30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백인미만 중소기업의 체불임금은 3백7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백67억원 보다 40%로 늘어났다.

또 8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임금도 3백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체불임금액도 5백9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1%증가했고 임

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2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 사업장수는 2백88개로 작년 동기보다 33.3% 늘어났고, 체불 사업장의 2백2개 업체가 휴.폐업했는데 이는 작년같은 기간보다 66.6% 증가한 것이다.

회사 지정병원

'직업병' 판정 의문

- 대우조선노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요구 -

회사 지정병원에서 정상 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정받은 이들이 노조가 의뢰한 제3의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분석 및 재검진에서 무더기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 회사 지정병원의 직업병 판정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지난 90년 회사 지정병원인 대우병원의 직업성 난청 여부 조사서에 모두 정상 또는 비직업성 질병으로 판정받은 80명이 당시 노조의 의뢰를 받아 별도로 건강검진을 한 부산 동아대병원의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재분석한 결과 이중 69명이 직업성 난청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는 국회 일부 조찬원을 표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실에 관해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평화와 인권

준비 8 호(94.9.12)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이적단체 규정

신공안바람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속)회원 고영국(21)씨등 3명을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 강찬규(20)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미영(20)씨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샘'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지난 4월의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 조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신구금 절차의

불법성,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사건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신공안바람속에 주사파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꾀어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추교준(20)씨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인동 대공분실 밀실에서 팬티만 입히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 '조직의 비밀보장' 등의 강령과 규약을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허가된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대회' 등에 고등학생 참가를 배후조종했다는 부분이나 7일 고등학생 잡지 '새날열기' 편집장 정동익(1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고등학생

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샘'활동 참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징계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9일 영등포역상은 징계위를 열어 '샘'에서 94년 8월에 주최하고 출소장기수 임방

규씨가 초대손님으로 동행한 '얼다지기'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백미라(3년)등 2명을 퇴학시키고 18여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 동아리의 지도교사 김정녀씨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단체 '샘'은 15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고등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풍물, 노래모임, 전통무예반 등을 하여 왔으며 지난 92년 7월 창립되었다.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

10일,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열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사회환경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는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지난 10일 명동성당, 탑골공원 등에서 열렸다. 시민대행진은 84년 9월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들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등의 턱을 없애달라며 자살한 김순석씨, 92년 3월 뇌성마비 장애인이며 시인인 백민욱씨가 모교인 강남대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다 운동장에 떨어져 죽은 사례 등에서 보듯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장애인과 공유할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김성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46, 장애인 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은

"1회 시민대행진에서 휠체어 체험을 통해 사회교통시설이 얼마나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가를 경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시민대행진은 휠체어타기 외에도 안대로 눈을 가리는 장애체험을 추가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김조직위원장은 또 "장애인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의 무고고용비율 하향조정(2% - 1%)막기 특별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알 립 니 다 ◆
□ '정의구현 사재단' 20주년 기념 강연회
일 시 : 1994년 9월 14일 (수) 오후 7시 30분
장 소 : 광주가톨릭대학 강당
주 제 :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 9)
차 편 1차 출발지 - 오후 4시 30분, 나비위성당
2차 출발지 - 오후 5시 30분, 전주교구청
대 상 : 수도, 성직자 및 평신도

노동문제 중재나선 종교계

보복성 불씨안은 철도, 지하철문제에 의견표시

지난 6월 23일 공권력 투입으로 촉발된 열차파업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구속, 수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종교계가 '철도, 지하철 노동자를 위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책회의'를 마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3자'에 대한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중단 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당국이 실정법 논리에 입매여 강경책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켜 더한 대립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징계철회, 노사자율교섭, 경영혁신, 협상제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기독교 박영규 목사, 불교 탄성스님, 천주교 김승훈신부등 400여 성직자들이 연대서명한 것으로 종교계가 교단을 망라해 노동문제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대규모에 속한다.

노종, 외국노동자 수입증지 요구

국내 유류노동력 활용정책 촉구

합법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보다 더 나빠

2일 정부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발 및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동안 일할 외국연수인력 10,000명을 연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정부가 금년중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1만명을 추가 수입키로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연수생의 기본수당이 월 2백-2백60\$ (16만원-21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물론 불법취업자의 월 임금 4백-6백\$(40만원-48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취업자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편법적인 외국인노동자 수입정책을 즉

각 중단하고 2백40만명에 달하는 국내 유류노동력 활용 정책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소위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외국인 노동력 도입정책은 연수생 명목으로 현장에 취업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이나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및 근로조건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1박2일 정도의 간단한 소양교육을 받고 곧바로 중소기업에 배치된다.

현재 나라별 비율은 중국이 8천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3천명, 베트남 2천4백명, 방글라데시 1천6백명 등이다.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양심수 646명, 민가협 발표

전북지역, 강희남목사 등 14명 구속

최근 민가협은 9월 5일 현재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구속자가 7백44명이며, 신공안정국이 조성된 6.7.8월 구속자는 전체구속자의 50%가 넘는 4백3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1백 58명으로 36.57%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구속중

인 양심수는 모두 6백46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백68명으로 56.96%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지역은 강희남목사 등 14명이 국가보안법 및 집시, 폭력으로 구속되었는데, 전북대 4명, 전주대 2명, 우석대 6명, 사노맹회원 1명으로 밝혀졌다.

김영삼 정권이후 양심수 현황

자료제공-민가협 (단위:명)

94년 6,7,8월 구속자 현황				
신분별 분류	군인, 전경	노동자	학생	
	432명	10	114	256
적용법규 별 분류	출판인	중고인	재야, 기타	
	432명	4	3	45
적용법규 별 분류	국보법	업무방해	집시, 폭력	정의 조정법
	432명	158 36.57%	45 10.41%	175 40.50%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신분별)				
합계	군인, 전경	노동자	장기수	
	646명	22	125	75
	농민	재야	학생	
		1	141	282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의 적용법규				
국가 보안법	집시법	폭력	군관계	노동 관계법
368	140	173	5	106
56.96%	21.67%	26.78%	0.77%	16.40%
김영삼정부 이후 월별 구속자 (총 744명)				
9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	7	4	19	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43	28	7	13	28
12월	94년 1월	2월	3월	4월
20	4	41	24	25
5월	6월	7월	8월	
23	215	124	93	

평화와 인권

준비 9호 (94.9.2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0658-45-0152

한국 노동시간 세계 1위

생산성은 25위로 낮아, 국제경영개발연구소 분석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 국제경영개발연구소의 '세계 경쟁력보고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경쟁력 순위를 낱알이 매긴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노동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부하의 한국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국제적인 창피를 당할 정도로 기록을 내어 한국경쟁력의 현주소가 한눈에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한국은 41번째로 낮은 생활비가 든다. 뉴욕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한국의 생활비지수는 무려 93.5%로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거의 같은 생활비가 든다. 더구나 한국의 생활비에는 집값이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서민들의 물가고에 대한 원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에서의 집마련은 세계에서 6번째로 어렵다. 즉 주택복지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은 22위로서 여전히 저임금 그룹에 속한다고 나타났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

한국 노동자는 1년에 1백61일당 연간 노동시간이 2천5백47시간으로, 41개국중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노동쟁의 산업재해등에 의한 노동결손은 한국이 41개국중 9번째로 높다. 즉,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혹심하게 일을 하고 있으나,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전한 노동조건이 부족해 생산성이 25위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이유는 노동결손을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정부의 투명성 순위는 33위로 하위그룹에 속한다. 이는 정부정책이 폐쇄적이

고 예측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쉽게 받는 12위를 기록했다. 역시 일관성 부재의 결과이다.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그 결과로 한국의 금융동맹경화중은 세계 4위로 극단적인 상태다. 건강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은 세계 최하위이며 대표적인 예로 의사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세계 8위로 많아 의료부족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유엔 발전 사무국에서 제출한 '인간발전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과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경쟁력 개념과 사이의 커다란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건강권, 복지권, 주거권 등이 국가의 경쟁력이 포함되는 기준과 수출액과 제벌기업의 경기를 중심으로 보는 경쟁력 개념과의 커다란 차이가 이번 보고서에 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충격 속에 접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은 오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정신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정부를 방문하고 있다.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강덕경 할머니등 11명의 대표단은 15일 오후 일본의 한국정부는 경제인 단체등 이익단체의 영향력을 가장

「국제중재재판소를 지원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졌다.

또 16일에는 참의원 제2의 원회관에서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관민합동의 위로금 모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일본정부의 이 계획에 대한 규탄집회 및 시위를 「제일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필리핀인 전 종군위안부들을 지원하는 모임」 등과 공동으로 도시마 구민센터에서 17일 개최한다.

연락처 : 81-3-3364-2895
문의 : 정대협(263-2802)